

정책자료
2015-02

가구의 소비행태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성재민·권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목 차

요 약	i
제1장 머리말	(성재민) 1
제1절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의 구성	5
제2장 가구구조와 소비의 양상	(권혁진) 10
제1절 인구·가구구조의 추이	10
제2절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소비구조	13
제3절 가구유형별 소비구조 추이	22
제4절 저임금서비스 소비 부문의 변화	36
제3장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 (성재민)	42
제1절 머리말	42
제2절 기초통계	44
제3절 지출과 인구학적 특성, 소득 간의 관계 추정과 분해분석 ..	54
제4절 소 결	61

제4장 소비변화와 고용변화 : 가사생산대체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재민)	65
제1절 머리말	65
제2절 기초통계	67
제3절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증가의 원인 분석	74
1. 양극화와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이 고용증가에 미친 영향	74
2.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증가는 노동수요 주도적 현상인가: 임금에 대한 분석	81
제4절 소 결	84
제5장 결 론	86
..... (성재민)	86
참고문헌	93

표 목 차

<표 2- 1> 가계조사 목적별 개인소비분류	23
<표 2- 2> 식료품·비주류음료에 대한 소비 비중: 전체 가구	24
<표 2- 3> 식료품·비주류음료에 대한 소비 비중: 표준가구와 전체 가구 비교	27
<표 2- 4> 소득계층별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 비중 추이	29
<표 2- 5> 1인·2인 가구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 비중 추이	32
<표 2- 6> 가계조사의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 가구	34
<표 2- 7> 노인·맞벌이 가구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 비중 추이	34
<표 2- 8> 저임금 서비스 항목에 대한 소비지출 항목	37
<표 3- 1> 가구유형별 비중 추이	46
<표 3- 2> 가구원 연령 구성별 비중 추이	48
<표 3- 3> 가구 유형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	50
<표 3- 4> 가구 유형별, 가구 소득 수준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	51
<표 3- 5> 가구주 학력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	51
<표 3- 6> 가구주 학력별, 가구 소득 수준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	52
<표 3- 7> 가구원 연령 구성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몫 추이	53
<표 3- 8> 2014년 기준 다양한 소득 기준별 회귀분석 결과	56
<표 3- 9> 2014년 기준 다양한 소득 기준 구간별 및 도구변수 분석 결과	58
<표 3-10> 25~59세 가구주 기준 도시거주 2인 이상 가구 시기별 회귀분석 결과	59

<표 3-11> 25~59세 가구주 기준 도시거주 2인 이상 가구 분해분석 결과	61
<표 4- 1> 가사생산서비스 부문 정의	68
<표 4- 2> 임금분위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종사 임금근로자 비중(2014년 기준)	68
<표 4- 3>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임금근로자 추이	69
<표 4- 4>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세부 산업별 임금근로자 수 ...	69
<표 4- 5>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세부 직업별 임금근로자 수 ...	70
<표 4- 6>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교육수준별 임금근로자 수	71
<표 4- 7>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교육수준별, 직업별 임금근로자 수	72
<표 4- 8>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성별 임금근로자 수	72
<표 4- 9>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연령구간별 임금근로자 수	73
<표 4-10> 임금수준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여부별 임금근로자 분포	74
<표 4-11> 행정구역 단위 구분 지역자료 추정결과	79
<표 4-12> 노동시장권으로 구분한 지역자료 추정결과	80
<표 4-13> 노동시장권으로 구분한 자료를 이용한 임금 분위회귀 ...	83

그림목차

[그림 1- 1] OECD 국가들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2013)	1
[그림 1- 2]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	2
[그림 2- 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1960~2060)	11
[그림 2- 2] 가구원수별 가구추이(2010~35)	12
[그림 2- 3] 고령 가구주 가구유형(2010~35)	12
[그림 2- 4] 성·연령별 가구추이: 남성(좌) vs. 여성(우)	13
[그림 2- 5] 전체적인 소비구조 변화(1990~2014)	24
[그림 2- 6] 표준가구의 비중과 상대적 소득수준 추이 (1990~2014)	26
[그림 2- 7] 표준가구와 전체 가구 소비구조 변화 비교 (1990~2014)	27
[그림 2- 8] 중산층 소비구조 변화(1990~2014)	29
[그림 2- 9] 상위층 소비구조 변화(1990~2014)	30
[그림 2-10] 하위층 소비구조 변화(1990~2014)	31
[그림 2-11] 1인 가구 소비구조 변화(1990~2014)	33
[그림 2-12] 2인 가구 소비구조 변화(1990~2014)	33
[그림 2-13] 노인가구 소비구조 변화(1990~2014)	35
[그림 2-14] 맞벌이 가구 소비구조 변화(1990~2014)	36
[그림 2-15] 가구 유형별 저임금 서비스 수요의 변화(1990~2014)	38
[그림 2-16] 소득계층별 저임금 서비스 수요의 변화(1990~2014)	39
[그림 2-17] 상위 소득계층의 학력별 저임금 서비스 수요의 변화 (1990~2014)	40
[그림 2-18] 맞벌이 가구의 저임금 서비스 수요의 변화 (1990~2014)	40

[그림 2-19] 도시지역의 저임금 서비스 수요의 변화(1990~2014) 41

[그림 3- 1] 가구 유형별 비중 추이 45

[그림 3- 2]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몫과 연간소득 추이 49

요약

본 연구는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저숙련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할 만한 노동수요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원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

본 연구는 저임금 원인과 현상 전반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저임금 일자리 중 특히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일자리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음식업, 육아 등 돌봄, 수리, 청소, 세탁 등 문헌에서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Services that substitute for home production activities)으로 지칭되는 부문의 저임금 일자리 변동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가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은 소득불평등 심화,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심화 같이 가구 수준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가구의 소비패턴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노동수요 변화동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고용자료를 이용해 소득불평등 심화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구의 인구학적 변동이 소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된 바 있지만, 마찬가지로 고용자료를 이용해 관련 분야 고용에 미친 영향도 분석이 미미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최근 추이를 가구 수준에서 나타나는 인구학적, 불평등적 변화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와 연관시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2장과 3장에서 소비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 패턴 변화와 소득, 인구학적 변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고용자료를 이용해 소득, 인구학적 변동과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가구불평등 심화/인구학적 변동 → 소비양상 변화 → 고용변동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인과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지만, 소비자료가 있으면 고용자료가 없고, 고용자료가 있으면 소비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제 분석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대신 가구불평등 심화/인구학적 변동 →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증가, 가구불평등 심화/인구학적 변동 →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고용증가로 나누어 각 가설이 데이터에 의해 지지되는지 별도의 분석을 수행했다. 소비자료를 이용해 전자를, 고용자료를 이용해 후자를 분석했으며, 각각 3장과 4장에서 다루었다. 각 장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인구, 가구구조 변화의 장기 경향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구조 변화와 관련된 사실들을 정립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1990~2014년) 신분류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1990년 이후 전반적인 소비구조의 장기적 변화도 살펴보았다. 추이 분석과 더불어 기존 선행 연구들도 정리하였다.

분석결과 소비 패턴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식료품, 의류, 신발 등 재화 소비 비중의 축소였다. 이와는 반대로 분석기간 동안 음식·숙박, 주거, 교통, 통신, 보건은 지출이 증가하였다.

표준가구를 설정하고, 표준가구 대비 각 유형별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를 비교·검토해 보면, 표준가구의 소득 수준 증가로 인해 상위 소득층의 소비구조가 최근 들어 표준가구와 상대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1인 혹은 2인 가구의 소비구조는 하위층의 소비구조와 유사한 편이다. 즉, 생활필수품에 가까운 소비의 비중은 높은 반면, 다른 항목들의 비중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노인가구의 소비구조를 표준가구와 비교해 보면, 식료품·비주류 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 항목과 같은 생활필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이 표준가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주류·담배,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비중은 표준가구와 유사하게 나타

났다. 그리고 나머지 6개 항목들(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은 표준가구에 비해 매우 낮았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소비구조는 표준가구와 비교할 때 교통, 통신, 음식·숙박에 대한 소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건, 오락·문화, 교육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소비 패턴 변화 외에도 Lindley and Machin(2013)에 기초한 저임금 서비스 분류에 따른 항목들을 저임금서비스 소비 분야로 정의하고 지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들 서비스 소비분야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던, 또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던 자체적인 생산활동이 외부화되었다는 의미에서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이라 부를 수 있다.

가구 유형별로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이 지출은 증가하는 추이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가구 유형별로는 차이가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소비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은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경우 1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볼 때, 하위층의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중산층과 상위층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소득수준만이 아니라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차이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3장에서는 좀 더 분석의 초점을 가사생산대체서비스로 옮겨 가구의 인구학적 변동, 소득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소득 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1보다 큰 값이 도출되어,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이 사치재 특성을 가지고 있음과도 연관되어 있다.

전반적인 소득 향상 및 고소득 중심의 불평등 심화는 둘 다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증가를 야기할 것이다. 이는 소득 구간별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맞벌이 가구 증대, 1인 가구 증대, 배우자 없는 2인 이상 가구의 증대는 대체서비스 증가의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6세 미만 자녀 유무는 2000년대 중후반에는 대체서비스 비중 증

가의 방향으로 작용했지만, 무상보육 확대로 최근에는 그 힘이 약화되었다. 반면, 고령 가구원의 존재는 고령자 관련 서비스 증대로 대체서비스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최근 들어 엇보인다. 특히 측정오차를 통제한 모형에서 그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분해를 해보면, 소득 증가와 맞벌이화 같은 가구 형태 변화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비중 증가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은 소비패턴 변화, 특히 저임금 고용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의 증가에서 예상대로 양극화로 인한 고소득층 증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맞벌이화 같은 인구학적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가계생산대체서비스 분야 지출 성장이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는 특성상 사람이 오갈 수 있어야 하므로, 국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르면,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가 많아야, 또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그 근처에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가 활발하게 생길 수 있다. 이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지역 대표성이 있는 고용자료여야 하므로, 통계청 지역고용조사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지역을 구분할 때 광역시 및 시군 단위를 독립된 지역으로 간주하는 통상적인 분석과 노동시장권 설정 이론에 따른 노동시장권역 구분에 근거한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행정단위에 기반한 분석에서는 고소득층 소득 몫 증가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고용 간에 양(+)¹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던 반면, 노동시장권에 따라 분석할 경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양(+)¹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선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도 활발한 결과가 행정단위/노동시장권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해당 지역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근로자, 특히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의 임금에 미친 영향도 확인해본 결과, 상위층 임금 몫이 커질 때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이 더 증가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좀 더 뚜렷한 임금 증가효과는 기혼여성 고용비중에서 나타났다. 해당 지역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면 임금 분위가 낮아질수록 더 크게, 통계적으로도 뚜렷이 유의하게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볼 때,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의 고용증가는 노동수요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으로 간주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관련 종사자 임금이 기혼여성 경제활동이 강한 지역과 상위층 임금이 보다 빠르게 오르는 지역에서 더 많이 오르고 있는 현상도 분석결과 관찰되었다.

일자리 양극화로 인한 고소득층 소득성장이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강화, 1인 가구의 증가 같은 인구적 변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추세에 가깝다. 이는 일종의 파급효과로서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결국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업 고용정책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더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볼 때 저숙련 서비스업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이 옮겨져야 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일자리가 증가할 부문은 바로 이들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미 법안으로 검토되고 있듯이 가사서비스업에 사회보험이 적용되게 하거나,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은 소규모 사업체가 많으므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두루누리 사업같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이미 음식업의 경우 기존의 주축이었던 고졸 이하 여성 조리사나 서비스 종사자는 감소하고 대신 전문대졸 이상 남성 조리사나 서비스 종사자가 증가해 일자리 특성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의 특성상 보육, 돌봄같이 사회서비스 영역이

커 정부의 지원정책도 영향이 상당히 크다. 어떻게 하면 이 분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분야에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 질까지 높일 수 있을지에 정책적 고민을 집중할 때다.

제 1 장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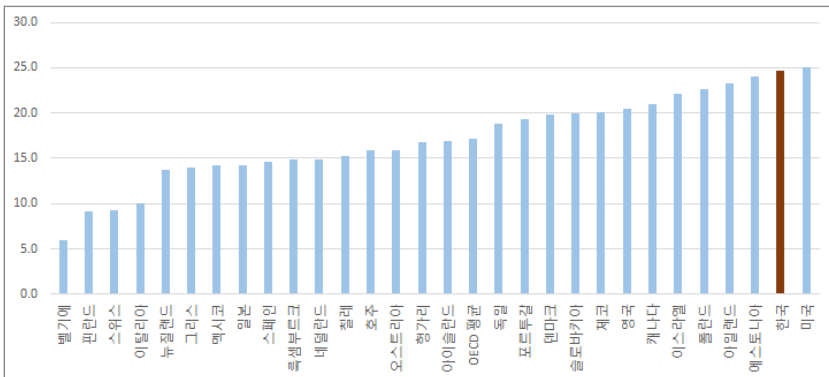
제1절 문제의식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최상위권에 속하는 저임금 고용비중을 보이는 나라이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저임금 고용비중 증가 추이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2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1) OECD 국가들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201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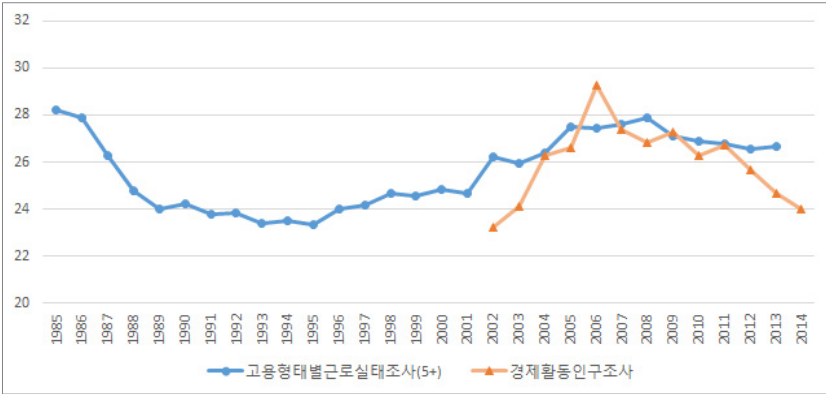


주: OECD 국가들 중 저임금 비중을 보고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 2013년 기준.
 자료: Online OECD Employment database, <http://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earndisp>.

2 가구의 소비행태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림 1-2)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주: 수집된 자료는 월급여이므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후 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10+),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우리나라에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이유는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다. 기술변화, 국제화의 영향으로 중간일자리가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 기업의 고용관행이 비표준적인 고용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 사회보험 등 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난 비공식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것, 최저임금 수준 및 준수율 등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저임금 일자리는 서비스업에 많은 가운데, 사업서비스 처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도 많이 있지만, 음식업, 육아 등 돌봄, 수리, 청소, 세탁 등 가구(household)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도 많이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관심은 이상과 같은 저임금 원인과 현상 전반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저임금 일자리 중 특히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일자리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음식업, 육아 등 돌봄, 수리, 청소, 세탁 등 문헌에서 가사생산 대체서비스업(Services that substitute for home production activities)으로 지칭되는 부문의 저임금 일자리 변동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가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은 소득불평등 심화,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심화 같은 가구 수준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을 늘려 저임금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노동수요 변화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이다.

왜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이 있다. 먼저 보몰(Baumol)의 가설이다. 보몰에 따르면,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일자리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대와 그에 따른 임금 상승에 따라 함께 임금이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한편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로 인해 줄어든 노동력이 이동해 진입하는 효과가 더해져 서비스업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게 된다.

보몰의 가설이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에 국한되지 않는, 좀 더 서비스업 일반의 고용성장과 관련된 가설이라면, 또 다른 가설로는 가사생산을 대체하는 서비스업이 가지고 있는 사치재 특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있다. 이들 서비스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용이 증가하는 사치재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반적인 소득의 상승이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 일자리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혼여성의 노동력을 좀 더 시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성장한 나라들에서 좀 더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도 있다.

최근에는 양극화로 인한 소득불평등 심화, 그중에서도 특히 고소득층의 빠른 소득증가가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 증대로 귀결되었다는 주장도 등장하였다. 이 가설은 최근에야 등장한 가설이므로 좀 더 자세히 부연해 보겠다.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는 국제적 논의에 따르면, 일자리 양극화 현상과 관련이 깊다. 일자리 양극화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 정도의 가설이 있다. 먼저 기술에 의해 반복적 업무가 대체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다. 컴퓨터 등 IT 기술의 진전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조립공정, 단순 사무직 등 반복적 특성을 갖는 업무(routine task)들이 로봇, 컴퓨터 등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대신 이런 장치를 만들거나, 추상적 판단을 하거나, 창조적 사고를 하는 유형의 고숙련 일자리,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숙련이 중요한 일자리, 저숙련 일자리이지만 반복

적 성격이 적어 기계 등으로 대체하기 힘든 유형의 일자리가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반복적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업무인 제조업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노동이나 사무직 중에서도 단순사무 업무는 숙련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오랜 습속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중간 정도의 임금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지니는 일자리의 수요 감소는 이들 일자리의 임금 감소 또는 정체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양극화는 국제화, 특히 해외 아웃소싱(offshoring)의 영향으로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다. 해외 아웃소싱은 넓게 보아 부품 등 중간재를 수입하거나, 일부 공정을 통째로 해외로 외주화하여 생산하거나, 해외투자공장을 만들어 생산을 국제화하는 등의 기업 활동을 지칭한다. Blinder(2007)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웃소싱 가능한(offshorability) 일자리는 전체 미국 일자리의 약 20%대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 아웃소싱이 가능한 일자리는 기술변화로 대체되는 일자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 중간수준 일자리 감소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양극화 발생에 대한 소비 변화 가설이 있다. 앞의 두 가설이 왜 중간임금 일자리가 줄고 고임금 일자리가 증가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면, 이 가설은 왜 이러한 기술변화와 국제화의 영향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제시한다. 이 가설은 기술변화와 국제화로 인해 고소득자 노동수요가 커지면서 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청소, 요리 등을 시간부족으로 인해 외부 조달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런 일을 대신해줄 저숙련 노동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Mazzolari & Ragusa, 2013).

양극화에 대한 세 가설 중 앞의 두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검증이 있어왔으며, 대체로 우리나라 상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져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 번째 가설에 대해서는 검증이 시도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 변화 가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가사생산대체서비스는 양극화 가설로 환원될 수는 없다. 보물의 가설, 사치재 가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강화 같이 가

구수준에서 발생하는 인구학적 변화 가설 등 다양한 가설이 존재한다. 이들 가설 중 무엇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보물이 말했듯이 각 요인들이 모두 기여하고 있을 것이다(Baumal, 2007). 이 연구에서는 가사생산대체서비스가 사치재 성격이 있는지, 가구의 인구학적 변동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분석해 볼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양극화라는 시대의 트렌드와 기혼여성의 경제 활동 강화 등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변화가 정말 가구의 소비지출 패턴을 변화시켰는지 확인해 보고, 이렇게 변화된 소비패턴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고용증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시장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후 저임금 노동시장을 개선하려면 어떤 정책적 시야가 필요한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이미 가구의 인구학적 변화가 소비패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것이 산업구조에는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체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12가지 소비 품목 대분류에 근거해 분석하며,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비에서 발생한 변화가 실제 고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검증까지 나아간 연구는 부족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가구의 소비행태 변화의 중요한 부분인, 저임금 서비스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에 초점을 두어 정말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분야 지출이 증가해 왔는지, 증가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출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관련 고용증감과 임금 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구불평등 심화/인구학적 변동 → 소비양상 변화 → 고용변동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인과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면 지출, 고용, 가구의 인구학적 상황이 모두 파악되는 하나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이를 모두 담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 가구상황과 지출, 가구상황과 고용을 따로 따로 분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가구변화와 고용 분석에서 그럴듯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실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착시현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실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구상황과 지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구상황과 지출 관련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가구의 인구학적 변화와 소비항목별 지출 패턴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모든 소비항목과 인구학적 패턴의 분석을 진행한 후 초점을 가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에 맞춰 인구학적 패턴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해 볼 것이다. 다시 말해 가구불평등 심화/인구학적 변동 →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증가, 가구불평등 심화/인구학적 변동 →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고용 증가로 나누어 각 가설이 데이터에 의해 지지되는지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고, 양 데이터에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을 통해 분석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 인구, 가구구조 변화의 장기 경향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구조 변화와 관련된 사실들을 정립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1990~2014년) 신분류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1990년 이후 전반적인 소비구조의 장기적 변화도 살펴본다. 동 자료에서 제공하는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들은 대·중·소분류, 즉 3분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대분류는 12개, 중분류는 99개, 그리고 소분류 항목은 35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대분류 12개 항목을 중심으로 1990~2014년 기간 동안의 소비구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의 품목별 소비와 과거부터 나타난 가구의 인구학적 변화의 연관성도 검토해 볼 것이다. 가구의 소비구조는 가구의 다양한 경제·사회적 특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구조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각 가구 유형별로 그 변화를 추적·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좀 더 심화된 가구 인구학적 변동과 소

비지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하나의 기준점으로 표준가구를 설정하고, 표준가구 대비 각 유형별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가구특성별 소비구조 변화 추이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8~59세 미만의 남성 가구주이면서 배우자가 있고, 가구 내 취업자는 가구주 1명이면서, 가구원 수는 3~4명인 가구, 즉 홀벌이 가구이면서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표준가구로 정의한다. 다만, 1990~2014년 기간에 대한 가계동향조사 신분류 자료 중 1990~97년 자료에서는 배우자 유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배우자 조건을 제외한 가구를 표준가구로 정의한다.

장기적인 인구·가구구조의 변화가 소비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소비수요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생산을 변환시킴으로써 산업·고용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김동구·박선영, 2013; 최바울, 2013; 황수경, 2013; 황상필, 2009). 2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가계조사의 349개 소분류 항목을 바탕으로 Lindley and Machin(2013)에 기초한 저임금 서비스 분류에 따른 항목들을 저임금서비스 소비 분야로 정의한다. 이들 서비스 지출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든, 또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던 자체적인 생산활동이 외부화되었다는 의미에서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이라 부를 수 있다. 이들 항목에 대한 소비지출액이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추이를 검토할 것이다.

2장이 기초통계의 장기시계열적 검토를 통해 사실이 무엇인지 정립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면, 3장에서는 초점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뿐 변화에 두어 지출 변화가 소득의 분배, 소득 성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가구의 인구학적 변화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먼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관련 기초통계를 정리한 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과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소득과의 관계를 추정할 것이다. 여기서 얻은 파라미터를 이용해 소득 탄력성을 계산하여 가사생산대체서비스가 소득이 증가할 때 지출이 감소하는 열등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소득이 증가한 만큼은 아니지만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는 필수재 성격인지, 아니면 소득 증가보다 더 큰 탄력성을 가지는 사치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이는 가사생산대체서비스의 소득과의 관련성을 잘 드러내는 분석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시간에 따른 가사생산대체서비스의 중요도 변화에 이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불평등이나 인구특성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미치고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분해(decomposition) 분석해 볼 것이다.

2장과 3장에서 소비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 패턴 변화와 소득, 인구학적 변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면, 4장에서는 고용자료를 이용해 소득, 인구학적 변동과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 간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 장이 바로 본 보고서의 목표였던 가구의 소비패턴 변화와 고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장이다. 다만 하나의 자료에서 가구의 인구학적 변동, 가구소득 변화, 소비지출 패턴 변화, 고용 변동을 모두 분석할 수는 없으므로, 2장과 3장에서는 소비자료를 이용해 가구의 인구학적 변동, 가구소득 변화가 소비지출 패턴 변화와 맺는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4장에서는 이렇게 정립된 사실을 바탕으로 깔고 가구의 인구학적 변동, 가구소득 변화를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변동과 연결시킬 것이다. 지출 데이터에 고용 데이터도 함께 있다면 이렇게 별도로 따로 떼어 분석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출이 있는 데이터에는 고용이 없고, 고용이 있는 데이터에는 지출이 없으므로 분리된 접근이 불가피하였다.

이와 같은 검증은 주로 지역수준 자료를 이용해 이루어진다. 이 연구의 가설에 따르면,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가 많은 곳이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어야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자료를 이용해 실제 이런 경향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Mazzolari & Ragusa(2013), Autor & Dorn(2013)의 접근법이였다.

이런 이유로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해 관련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3장까지의 분석은 지출 측면에 대한 분석이기에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이용하였는데, 이 장은 지역별 고용에 대한 분석이기에 통계청 지역고용조사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고용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표준산업분류를 이용해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을 정의하고 관련 고용이 실제 저임금 고용 성격이 강한지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기초통계 제

시 후 3절에서는 고용자료에서 식별 가능한 변수인 고임금자의 소득증가가 뚜렷한 지역,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할 것이다.

노동수요 증가로 인한 고용 증대라면 대체서비스 산업분야 근로자의 임금이 고임금자의 소득증가가 큰 곳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가구의 인구학적 변동을 가구 소비패턴 변화와 연결시킨 연구들은 몇 있었지만, 실제 고용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었고, 특히 불평등 강화로 인한 고소득층 소득 증대가 가구의 소비패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토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패턴 변화 중에서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에 초점을 맞춰 인구변동/불평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기여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가구지출을 매개로 발생하는 저임금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 장에서는 전체 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저임금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책 함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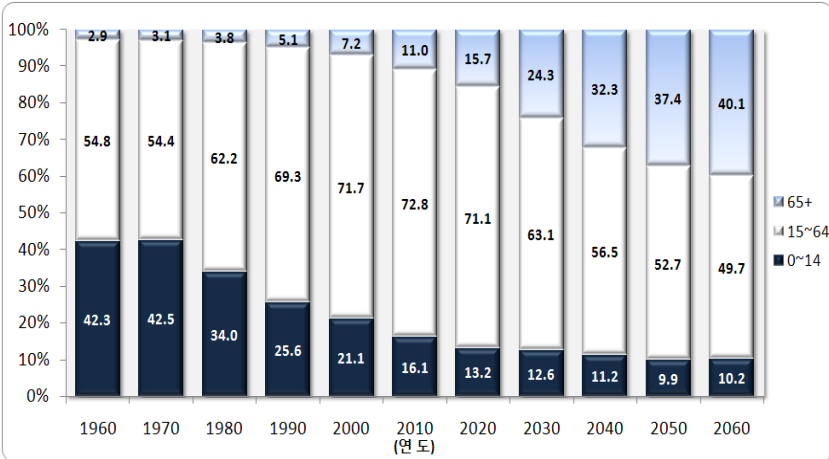
가구구조와 소비의 양상

제1절 인구·가구구조의 추이

통계청(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까지 성장하지만, 이후 감소하여 2060년 4,396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960년 2.9%에서 2010년 11%까지 증가했으며, 206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유소년 인구(0~14세) 비중은 1960년 42.3%에서 2010년 16.1%(798만 명), 2060년 10.2%(447만 명, 2010년의 56% 수준)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16년 3,704만 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그림 2-1 참조). 그 결과, 2017년에는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초과할 것이며,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10명(노인 8명, 어린이 2명)이 되는 등,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가구구조는 소·핵가족화, 고령화, 만혼현상, 이혼율의 증대, 저출산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단독가구 수(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414만여 가구(23.9%)로 2005년 대비 3.9% 증가하였고, 수적으로도 1980년의 11배, 2005년의 1.3배에 이른다(전상민, 2013, p.21에서 재인용).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부부+자녀가구는 감소하고, 1

〔그림 2-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1960~2060)



자료: 통계청(2011)의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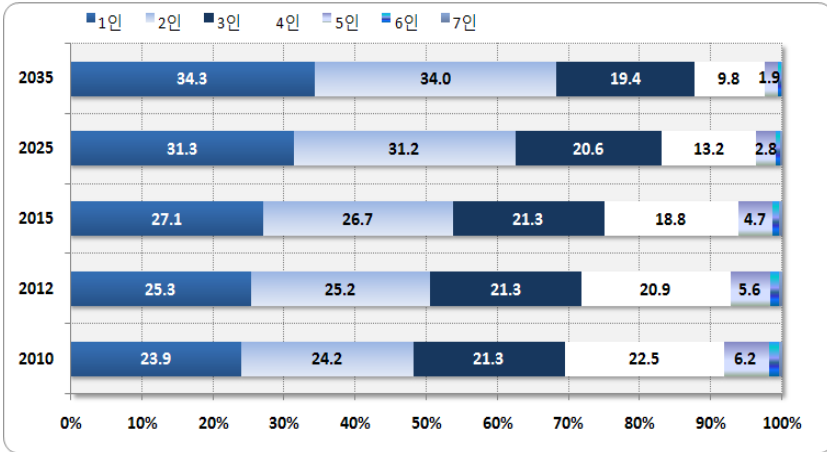
인 가구 및 부부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의 2010~35년 장래가구 추계). 예를 들어, 2010년에 부부+자녀가구가 642만 7,000가구(37.0%)로 가장 많고, 1인 가구(23.9%), 부부가구(15.4%) 등의 순이었지만, 2035년에는 1인 가구(34.3%), 부부가구(22.7%), 부부+자녀가구(20.3%) 순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또한 가구원수별 가구구성비는 2010년 2인 > 1인 > 4인 > 3인 순이던 것이 2012년 이후는 1인 > 2인 > 3인 > 4인 순으로 전망되며, 이 중에서 1인 및 2인 가구는 2010년 835만 5,000가구(48.1%)에서 2035년 1,520만 7,000가구(68.3%)로 증가함으로써, 장래에는 1~2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대표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그림 2-2 참조).

가구주 특성 측면에서는 향후 고령 가구주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다.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전체적인 비중은 2010년 17.8%에서 2035년 40.5%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때 65세 이상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및 부부가구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각각 105만 6,000가구(34.2%), 103만 8,000가구(33.6%)로 67.8%를 차지하는데, 2035년에는 각각 343만 가구(38.0%)와 291만 9,000가구(32.3%)로 증가함으로써 70.3%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75세 이상 가구에서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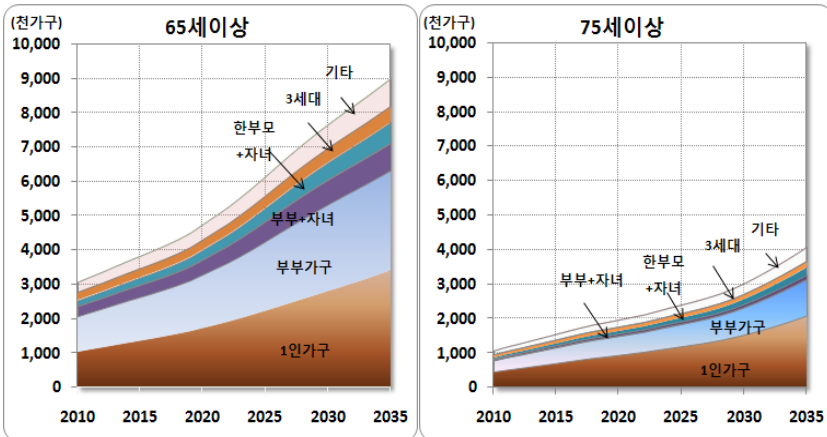
12 가구의 소비행태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림 2-2) 가구원수별 가구추이(2010~35)



자료: 통계청(2012)의 [그림 2-19].

(그림 2-3) 고령 가구주 가구유형(201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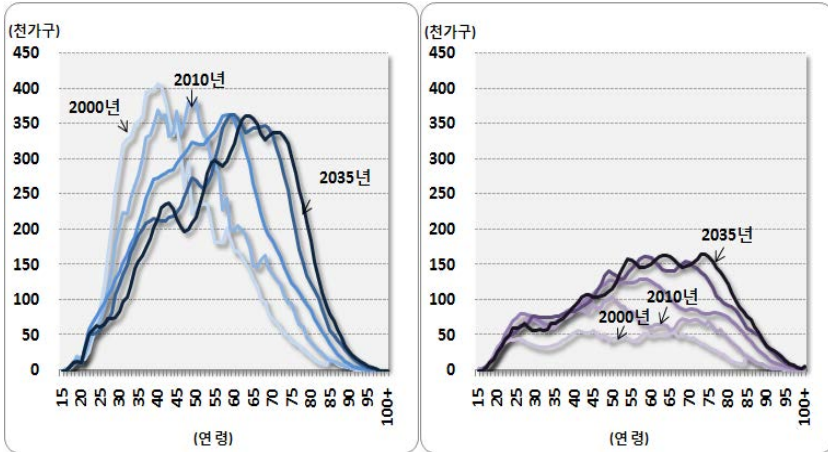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2)의 [그림 2-30]과 [그림 2-31].

한부모+자녀가구를 제외한 다른 가구유형 구성비는 점차 감소할 전망인데, 이러한 1인 가구의 변화가 75세 이상 전체 가구 연평균 변화 중 기여하는 바가 53.6%에 이를 전망이다.

다음으로 성별 가구주 현황을 보면, 2010년 남성 가구주 가구는 1,290만 3,000가구(74.3%)이며, 여성 가구주 가구는 445만 7,000가구(25.7%)이

[그림 2-4] 성·연령별 가구추이 : 남성(좌) vs. 여성(우)



자료: 통계청(2012)의 [그림 2-3]과 [그림 2-4].

지만, 2035년까지 여성 가구주 가구가 점차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35.1%를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기대수명 증가, 직업 등의 이유에 의한 분리가구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그림 2-3]에서 보면, 초혼 연령의 상향,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남녀 모두 가구주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어 2035년에는 60대가 2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주 중위연령은 2010년 48.80세에서 2035년 60.92세로 12.12세 증가할 전망이며, 남성의 경우 2010년 48.22세에서 2035년 60.77세로, 여성의 경우는 2010년 50.96세에서 2035년 61.23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2절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소비구조

“경제는 ‘생산-분배-소비-생산’으로 이어지는 재생산 과정이다. ... 경제의 다른 국면에 비해 소비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영역이다. 특히, 경제학에서 소비는 주로 거시집계변수로서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특정 소비항목에 대한 분석을 제외하면 개별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에 대한 분석은 발견하기 쉽지 않다”(백운광, 2008, pp.4~5). 그나마 경제학에서 이루어진 소비지출에 대한 몇몇 연구들조차 주로 분배 문제에만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소비지출의 분배상태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가구의 소비행태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소비지출(액)이 소득에 비해 개인/가구의 예산제약을 더 적절하게 반영한다든지, 혹은 개인/가구가 얻는 최종적인 후생수준을 더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의 대리변수로서 소비지출의 전체적인 분배상태와 소비지출 항목별 분배 상태와 관련된 경제·사회적 함의는 다를 수 있다. 또한 2007~08년 경제위기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인/가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소비는 특정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의미하며, 가구 혹은 개인은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소비행위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소비행위는 “서로 다른 소비항목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상호 관련된 소비항목들로 구성되고 그러한 소비항목들은 결합하여 하나의 패턴을 이룬다.”¹⁾ 이때, 소비지출(패턴) 혹은 소비구조²⁾는 “개개인이 실제로 소비하는 생활수단의 종류와 내용, 소비패턴에는 어느 정도 개성적인 폭과 차이는 있으나, 이미 존재하는 평균적이고 표준적인 범위와 한계 안에서”(백운광, 2008, p.28에서 재인용) 시·공간적으로 형성된다. 왜냐하면 소비구조는 산업생산 및 GDP 등과 같은 거시적 요인, 가구/개인별 예산제약과 상호이질적인 특성 등과 같은 미시적 요인, 그리고 해당 사회의 역사 및 관습 등과 같은 문화적·지리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소비구조는 “상호연관된 소비항목들이 내재적으로 구조화된다”(정영숙, 2000; 성영애, 2013, p.159에서 재인용) 패턴이지만, 구조화되는 방식은 사회의 시·공간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구/개인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지위에도 의존한다.

1) 성영애(2013), p.159에서 재인용.

2) 소비구조는 연구자마다 유사한 의미지만 다양한 용어로 설명되고 있다. 소비지출 양식(최홍철·최현자, 2014), 소비구조(김동구·박선영, 2013), 소비지출패턴(성영애, 2013). 본고에서는 ‘소비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구조에 대한 최근의 많은 국내 연구들은 인구·가구 구조변화에 주목한다. 개인주의화에 따른 자녀분가 및 핵가족화 현상, 고령화에 따른 노인 증가, 만혼현상, 이혼율의 증대, 저출산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이 소비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주목한다. 예를 들어, 가구원수의 변화(단독가구 및 2인 가구의 증가), 가구주 특성의 변화(고령자 혹은 여성 가구주 증가),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가구의 절대적·상대적 증가는 가구 소비패턴의 변화를 함의하는데, 이러한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연구들의 내용과 함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단독가구는 일반적으로 열악한 재무상태와 불안정한 고용·주거 상태로 인해 소비수준은 물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낮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 30세 미만과 65세 이상, 저학력자들이 단독가구로 생활한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반정호, 2012; 전상민, 2013, p.22에서 재인용). 이러한 단독(1인)가구의 소비구조에 주목한 초기 연구들은 다인가구의 소비구조 혹은 전반적인 경제생활과 비교하거나(심영, 2002; 최승균·박대섭·홍완수, 2012; 여운경, 2003; 김년희·채정숙, 2005; 정운영·정세은, 2011; 반정호, 2012), 혹은 특정 연령대의 단독가구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상민(2013)에 따르면, 20~40대의 청장년층 단독가구(강정희·설연옥, 2012; 심영, 2002; 박선옥·최현자, 2008), 60대 이상의 노년층 단독가구(권오정, 2010; 최경원·임연옥·윤현숙, 2012; 최옥금, 2011)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단독가구 내 경제·사회적 이질성에 따른 소비구조의 차이를 유형화하고 있는 전상민(2013)과 성영애(2013)의 최근 연구들은 주목할 만하다.³⁾ 전상민(2013)에 따르면 전체 단독가구들은 칩거생활 지출형(22.72%), 사교적 가정생활 지출형(21.5%), 월세·교통비 지출형(24.49%), 치장·외식·오락비 지출형(27.58%), 의료비 지출형(7.3%)으로 분류·구성된

3) 성영애(2013)는 단독가구주의 연령대별 소비구조를 각각 유형화하는 반면, 전상민(2013)은 연령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유형화된 소비구조에서 연령별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 칩거생활 지출형, 사교적 가정생활 지출형, 의료비 지출형은 60대 이상의 기혼·무배우자 여성이 많아 사별한 독거여성 노인이 많고,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자가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갖는다. 반면, 월세·교통비 지출형과 치장·외식·오락비 지출형은 20~30대와 50대의 독신 남녀가 많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가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칩거생활 지출형은 가정식비(40.15%)와 광열수도비(14.68%), 사교적 가정생활 지출형은 가정식비(23.99%)와 광열수도비(11.46%), 교양오락비(4.06%), 의료비 지출형은 보건의료비(42.11%), 가정식비(16.92%), 월세·교통비 지출형은 월세(19.73%)와 교통비(14.39%), 외식비(13.26%), 통신비(5.11%), 치장·외식·오락비 지출형은 이미용용품·장신구·교제비 외(27.58%)와 외식비(15.18%), 교양오락비(5.62%)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영애(2013)는 단독가구를 청년층(34세 이하), 중장년층 및 노년층(65세 이상)으로 1차 구분한다. 나아가 청년층 내 소비구조 유형화 결과를 보면 다양한 활동지향형(음식숙박비, 의류비와 주거비), 음식숙박비지출 중심형(음식숙박비, 주거비와 교통비), 주거비지출 중심형(주거비, 음식숙박비와 식료품비)과 교통비지출 중심형(교통비, 음식숙박비) 순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장년층은 음식숙박비지출 중심형, 식료품비지출 중심형, 주거비지출 중심형과 교통비지출 중심형 순으로 분류한다. 이때 식료품비지출 중심형(식료품비, 주거비, 보건비)을 제외하고는 중장년층의 소비패턴은 청년층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년층은 식료품비지출 중심형, 주거비지출 중심형(주거비, 식료품비와 보건비), 균형 지출형(식료품비, 주거비, 음식숙박비)과 보건비지출 중심형(보건비, 식료품비와 주거비) 순으로 분류된다. 노년층은 모든 유형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지출편중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특징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 역시 단독가구의 소비패턴을 분석한 연구들과 유사하게 분류할 수 있다. 즉,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소비패턴을 비교하는 연구들과 노인가구 내 소비구조를 유형화하는 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노인가구를 비노인가구와 비

교하고 있는 성영애·양세정(1997), 양세정·성영애(2001), 여윤경(2003)에서 보면, 노인가구는 소비 지출구성비에서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등 필수 소비항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사회활동과 관련이 높은 의류비, 교통비 및 기타소비지출의 비중은 비노인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가구의 소비구조를 유형화하고 있는 백학영(2010)은 전체 노인가구들을 여가지출형(22.8%)(교양오락·교통통신 중심), 식비지출형(20.7%), 관계지출형(20.5%)(기타소비지출), 의료지출형(16.3%), 주거지출형(13.3%), 교육지출형(6.3%)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결과는 노인가구 내에서 빈곤가구 여부에 따라 각 유형별 비중이 다소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빈곤가구의 경우 식비지출형이 34.3%, 비빈곤가구는 여가지출형 37.3%로 다르지만,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관계지출형으로 각각 20.4%, 20.5%로 그 비중도 유사하다는 점이다.

최옥금(2011)은 노인가구의 빈곤상태, 즉 경제적 지위에 따른 소비지출의 차이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기본생활지출 중심형(67%), 관계지출 중심형(13.4%), 주거지출 중심형(12.1%), 의료지출 중심형(11.9%) 순으로 노인가구의 소비구조를 유형화한다. 여기서 노인가구의 67%를 차지하는 기본생활지출 중심형의 가장 큰 소비항목이 식비라는 점은 백학영(2010)에서 식비지출형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두 연구 모두 기타소비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관계지출형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단독가구 혹은 노인가구의 소비구조를 유형화하고 있는 이상의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목적별 개인소비분류(COICOP) 12개 항목의 비중을 중심으로 소비구조를 일차적으로 유형화한다는 점이다.⁴⁾ 그리고 각 유형별 경제·사회적 특성들을 비교·검토한다는 점 역시 유사하다. 예를 들어 가구/개인의 소득 수준, 연령, 가구구성, 학력 및 주거형태가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비패턴이 구조화되는 방식은 가구/개인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지위에 의

4) 소비구조 유형화를 위한 방법론은 대개 군집분석 방법론을 사용한다.

존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이상의 연구들은 인구·가구 구조가 장기적으로 변화한 결과, 현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소비구조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단독가구와 노인가구의 증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인구·가구 구조의 장기적인 변화가 소비구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소비구조의 변화는 상품과 서비스 수요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산업구조에도 그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가구구조의 변화가 노동공급, 경제성장 및 재정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구고령화 및 청년인구 감소가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생산, 경제성장 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시 측면의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김용진·이철인, 2013; 박형수·홍승현, 2011; 홍석철·전한경, 2013; 김동구·박선영, 2013에서 재인용). 하지만 김동구·박선영(2013)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인구·가구구조의 변화가 모든 산업부문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경제 전체적인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는 전망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다.⁵⁾ 예를 들어, 최근 20~30대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소비패턴이 등장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수요가 창출되기도 한다. 고령인구 증가는 보건·의료산업 부문의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소위 실버산업의 고용과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즉,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황상필(2009), 김동구·박선영(2013), 최바울(2013) 및 황수경(2013) 등의 연구들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 연구는 앞서 살펴본 인구·가구구조의 변화 요인 외에도 전체적인 소비구조의 변화가 생산·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인 관점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저자들은 그 이유로 과거 고도성장기의 한국에서처럼 완전고용 내지는 노동에 대한 초과수요인 상황에서는 고령화가 생산 및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이미 상당 수준의 성장단계에 올라선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황상필(2009)은 가계동향조사(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비 지출패턴을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소비목적별 가계지출의 비중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2020년 소비지출 비중은 2008년에 비해 가구·집기, 의류·신발,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등에 대한 비중은 감소하고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보건·의료 등에 대한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저자는 소비목적별 가계소비지출 비중을 산업연관표의 15개 부문에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소비구조의 변화가 생산 및 고용 유발 경로를 통하여 산업구조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2020년)을 전망하고 있다. 그 결과 향후에는 교육, 보건·의료, 기타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생산 및 고용이 증가하지만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등 식료품 관련 산업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구조 변화로 촉발되는 소비구조 변화는 전체 생산을 증가시키는 반면 고용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데, 주요 요인은 보건·의료 및 기타서비스 부문의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보다 교육 지출비중 하락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업서비스와 같이 향후 상대적으로 고용창출력이 큰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황수경(2013)은 수요 측면의 요인 중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 등에 따른 ‘가구구조 변화→가계생산(household production)→서비스 수요 변화’ 경로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가구 내 취업자 수의 증가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는 가구/개인의 소비 및 시간배분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저자는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03~09년 원시자료)의 소비항목을 총 20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이들 항목별 수요함수를 QUAIDS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quadratic Engel curves). 동 연구의 특징은 소비항목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20개 분류 중에서 서비스 분야가 12개)인데,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소비구조의 변화

가 산업별로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여하튼 수요 추정결과, 핵가족화·소가족화 경향은 외식서비스, 휴가서비스, 교육훈련, 오락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고령화는 의료비와 주거비, 휴가서비스, 기타서비스 지출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여성 가구주의 증가 및 맞벌이 가구 증가는 가사서비스, 개인서비스, 교육훈련서비스 등의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향후 개인 및 가구의 서비스 수요는 의료·교육과 같은 생산성이 높은 분야 외에도, 훈련·가사·휴가·개인·오락 등 개인적이고 소프트한 서비스 영역의 수요 증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김동구·박선영(2013)은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가계 국산소비와 네 가지 유발효과(국내생산, 수입, 부가가치, 취업)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2010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12개 목적별 소비항목에 대한 소비함수를 추정하는 한편, IO와 연계하여 2035년까지 소비지출 패턴 변화가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한다.⁶⁾ 그 결과, 고령화는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의약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건, 정밀기기, 화학제품 부문에 가장 유리하지만, 생활필수품과 관련이 많은 전력, 가스 및 수도, 음식료품, 농림수산물 등도 수혜부문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인적자본의 축적과 연관성이 높은 교육, 외부활동과 관련된 운수 및 보관, 수송장비 등은 고령인구의 비중 증가로 인해 소비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유발효과 측면에서 보면, 전 부문 합계 국내생산유발액이 0.1% 증가하는데, 그 주요 요인으로 고령가구의 소비가 대체로 국내 생산되는 서비스 부문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 주목한다. 반면에 취업유발인원은 오히려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가 전체적인 고용에 미미하게나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6) 동 연구는 소비목적별 지출(COICOP) 비중을 산업연관표의 26개 부문별 가계최종소비지출 비중으로 연계하기 위해 독일통계청 SEA98의 41부문을 COICOP 12개 부문으로 통합·연계하고, 독일통계청 IO표의 71부문(CPA)을 한국의 IO표 26개 부문으로 통합·연계한다.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가구구조 변화의 경제적 영향만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의 가계소비지출 총액이 2035년까지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26개 부문별 가계 국산최종소비 지출액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최바울(2013)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가 산업별 산출액과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IO를 통해 추정하고 있다. 먼저, 맞벌이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지출 항목에 대한 소비함수를 추정한다.⁷⁾ 그 결과를 보면 맞벌이 가구의 증가가 전형적인 가계생산서비스를 대체하는 시장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황수경(2013)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기혼여성의 취업은 주로 서비스업(교육 및 보건업 43.3%, 음식점/숙박업 25%)에서 취업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음식료품 제조업은 6.9%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고소득층 및 고학력인 기혼여성의 취업에 따른 취업유발효과(특히 교육 및 보건업)가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별 편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중산층 이상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적 노력과 동시에, 가사·돌봄서비스 등과 같이 노동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인구·가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를 매개로 하여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를 위해 가계동향조사(통계청)의 소비항목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들에 대한 가구의 수요함수를 추정한다. 나아가 그 결과를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와 연계함으로써 소비구조의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상으로도 유사하다. 이에 세부적인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향후에는 서비스 산업 부문의 생산·고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 또한 유사하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소비항목은 대분류 혹은 중분류 수준으로 분류하고 산업은 대분류로 하여 두 자료를 연계한다는 점이다.

7) 최바울(2013)은 가계동향조사(구분류, 10개 소비분류) 2003~10년 월간자료를 사용한다. 이때, 외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비패턴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일부 항목(가사서비스, 외식, 사교육 등)을 분리하여 16개 소비품목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지출항목과 매칭된 산업은 11개 대분류 산업이며, 이때 소비항목이 2개 이상의 산업대분류에 포함될 경우 가장 비중이 큰 산업으로 매칭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산업을 대분류로 한다는 점은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부문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크다. 특히, 일자리 양극화를 소득불평등 심화가 고소득층의 소비 행태를 변화시켜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 이른바 대인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킨 결과라고 보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가설의 타당성을 한국의 상황에서 검토하기 위한 연구는 좀 더 세분화된 산업분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⁸⁾

제3절 가구유형별 소비구조 추이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1990~2014년) 신분류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1990년 이후 전반적인 소비구조의 장기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 자료에서 제공하는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들은 대·중·소 분류, 즉 3분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대분류는 12개, 중분류는 99개, 그리고 소분류 항목은 35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표 2-1>은 대분류 12개 항목인데, 본 절에서는 1990~2014년 기간 동안의 소비구조 변화를 대분류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⁹⁾ 이때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이하 식료품)에 대한 소비비중의 변화는 다른 항목들과 분리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식료품에 대한 가구 내 소비 비중이 1990년 이후 크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2014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다른 11개 항목과 그 추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경우 식료품을 제외한 항목들의 비중 변화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¹⁰⁾

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목적별 소비지출항목을 좀 더 세분화된 산업분류로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9) 본 연구에서는 가계조사 신분류데이터의 1990년 이후 항목별 소비액 중에서 기타 의제주거비 항목은 소비액에서 제외한다. 동 항목은 “자가를 임차한 경우 시설 및 노후정도가 유사한 주거를 빌린다고 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주거서비스 생산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현된 소비액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함을 밝힌다.

〈표 2-1〉 가계조사 목적별 개인소비분류

•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0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 09. 오락·문화
• 02. 주류 및 담배	• 06. 보건	• 10. 교육
• 03. 의류 및 신발	• 07. 교통	• 11. 음식·숙박
• 04. 주거 및 수도광열	• 08. 통신	•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표 2-2〉와 [그림 2-5]는 분석기간 동안 전체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식료품에 대한 소비 비중의 축소이다. 식료품에 대한 소비 비중은 1990년 29.5%로 가구소비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지만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 16.9% 수준까지 축소되었다. 이후에는 17% 내외 비중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매우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 다음으로 분석기간 동안 지출 비중이 축소된 항목은 3. 의류·신발 항목인데, 1990년 약 10%에서 1990년대 중후반 그 비중이 6% 내외로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 최근까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분석기간 동안 지출 비중이 증가한 항목들은 11. 음식·숙박, 4. 주거·수도광열, 7. 교통, 8. 통신 부문이다. 11. 음식·숙박은 경제 위기를 겪었던 1997~98년을 제외한다면 1990년 약 8%에서 2005년 약 15% 수준까지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세가 주춤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그 비중은 완만하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8. 통신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지출 비중이 급속하게 상승했지만 이후 최근까지 그 비중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주거·수도광열의 경우에는 분석기간 초·중반 기간에는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별다른 추이가 없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사실, 동 항목은 생활에 밀접한 소비 항목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 부문에 월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10) 이것은 전체 가구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가구유형별 결과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식료품에 대한 소비 비중의 변화는 별도의 표로 제시한다.

24 가구의 소비행태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있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 월세에 대한 가계부담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6. 보건에 대한 지출 비중은 1990년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약 6% 내외 수준이었지만, 이후 최근까지 완만하게 증가해 약 8%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고령자 가구 증가와 그에 따른 보건의료비 부담이 전체 가구소비 차원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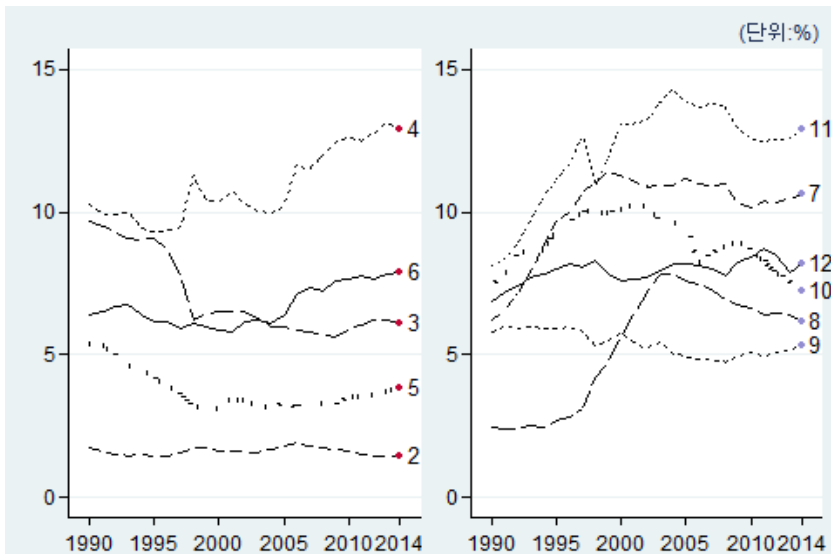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10. 교육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은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약 10% 수준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표 2-2〉 식료품·비주류음료에 대한 소비 비중 : 전체 가구

연도	1990	1995	2000	2003	2005	2010	2014
비중	29.5%	23%	19%	16.9%	16.9%	17.1%	17.5%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5) 전체적인 소비구조 변화(1990~2014)



주: 2. 주류·담배, 3. 의류·신발, 4. 주거·수도광열, 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6. 보건, 7. 교통, 8. 통신, 9. 오락·문화, 10. 교육, 11. 음식·숙박, 12. 기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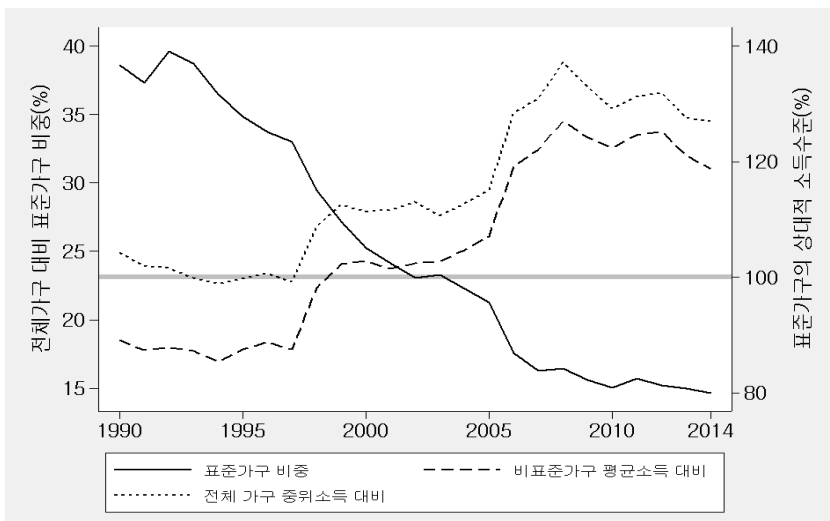
최근에는 약 7% 수준으로 낮아졌다. 일반적으로는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종종 사회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자녀수의 전반적인 감소와 부부+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전체 가구 차원에서 교육부문이 차지하는 소비 비중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구조의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 보았다. 하지만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의 소비구조는 가구의 다양한 경제·사회적 특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구조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각 가구유형별로 그 변화를 추적·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 소비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으로 소위 표준가구를 설정하고, 표준가구 대비 각 유형별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가구특성별 소비구조 변화 추이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8~59세 미만의 남성 가구주이면서 배우자가 있고, 가구 내 취업자는 가구주 1명이면서, 가구원수는 3~4명인 가구, 즉 홀벌이 가구면서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표준가구로 정의한다. 다만, 1990~2014년 기간에 대한 가계동향조사 신분류 자료 중 1990~97년 자료에서는 배우자 유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배우자 조건을 제외한 가구를 표준가구로 정의한다.

[그림 2-6]에서 보면,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러한 전형적인 홀벌이 가구 비중이 30~40%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15%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고 있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들 중에서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벌이 가구만을 표준가구로 정의한 것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도 분석기간 동안의 소비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한편, 분석기간 동안 표준가구의 소득 수준이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그림 2-6]에서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이전에는 비표준가구의 소득 혹은 전체 중위소득에 비해 표준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후 점차 높아져 최근에는 비표준가구 평균소득에 비해서는 약 120% 내외,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

[그림 2-6] 표준가구의 비중과 상대적 소득수준 추이(1990~201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소득의 중위값 대비 비율은 130% 내외 수준이다.¹¹⁾ 즉, 분석기간 동안 표준가구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은 중위값의 80~140% 수준으로 중산층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3>과 [그림 2-7]은 표준가구의 소비항목별 비중 추이를 앞서 살펴본 전체 가구와 비교한 결과이다.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몇몇 항목은 그 추이 혹은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 주류·담배, 3. 의류·신발, 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7. 교통, 8. 통신, 11. 음식·숙박 및 12. 기타 항목들의 비중과 추이는 전체 가구와 표준가구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1. 식료품, 6. 보건 및 9. 오락·문화의 가구 내 비중 추이는 표준가구와 전체 가구가 유사하지만, 식료품에 대한 비중은 표준가구, 오락·문화에 대

11) 측정소득변수는 가구단위의 처분가능 소득(즉, 가구특성에 따라 균등화된 소득이 아님)이며, 그 평균과 중위값은 가구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임.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 측정값을 균등화시키지 않는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개별 가구의 후생수준을 파악하기보다는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가구균등화지수의 의미와 활용상 주의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권혁진(2009) 참고.

한 비중은 전체 가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6. 보건에 대한 소비비중은 전체 가구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표준가구의 보건에 대한 소비 비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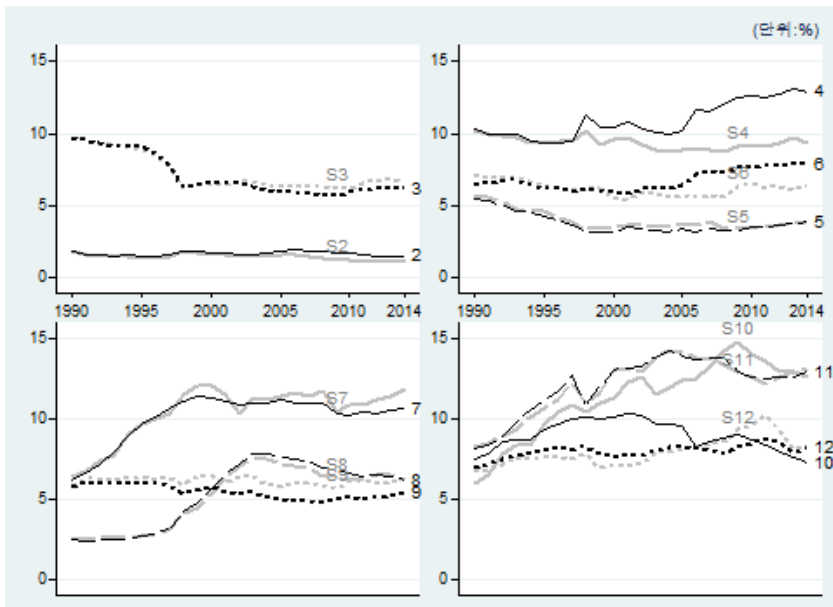
전체 가구와 표준가구의 차이가 큰 항목은 4. 주거·수도광열과 10. 교육이다. 전체 가구의 4. 주거·수도광열에 대한 소비 비중은 2000년대 중

〈표 2-3〉 식료품·비주류음료에 대한 소비 비중 : 표준가구와 전체 가구 비교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전체 가구	29.5	23.0	19.0	16.9	17.1	17.5
표준가구	30.1	22.9	18.4	15.1	14.1	14.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7) 표준가구와 전체 가구 소비구조 변화 비교(1990~2014)



주: 1)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주류·담배, 3. 의류·신발, 4. 주거·수도광열, 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6. 보건, 7. 교통, 8. 통신, 9. 오락·문화, 10. 교육, 11. 음식·숙박, 12. 기타.

2) 'S(숫자)'는 표준가구의 각 소비항목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반 이후 크게 상승하는 반면, 표준가구의 비중은 10% 내외로 큰 변화가 없다. 이는 표준가구의 소득 수준이 중산층에 속함으로써 전체 가구에 속한 저소득 가구의 월세부담의 영향이 제외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10.교육에 대한 전체 가구의 소비비중은 2000년을 지나면서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이인 데 반해서, 표준가구의 경우 1990~2010년 기간 동안 크게 상승하였다. 이것 역시 자녀를 둔 홀벌이 가구를 표준가구로 정의함으로써, 자녀가 없거나(단독 혹은 노인 가구) 혹은 자녀가 있지만 맞벌이인 가구 등이 제외된 것과 더불어서, 이들 가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표준가구의 소비구조와 그 추이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간주하여 다양한 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구조의 특징을 파악하기로 한다. 이에 가장 먼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석대상 가구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소득계층별 소비구조의 변화를 살펴본다. 소득계층 구분은 각 연도별로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계층을 상위층, 중위값의 3분의 2 미만 계층을 하위층, 그리고 그 사이 계층을 중산층으로 각각 정의한다.

<표 2-4>와 [그림 2-8]을 통해 중산층과 표준가구의 소비구조 변화는 대부분의 소비 항목에서 유사한 편이다. 예를 들어, <표 2-4>의 식료품에 대한 소비비중의 추이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유사한 편인데, 특히 중산층과 표준가구의 경우에는 그 수준도 상당히 비슷하다. 이처럼 표준가구와 중산층의 소비항목별 비중의 추이와 수준까지 모두 비슷한 항목들은 2. 주류·담배, 3. 의류·신발, 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6. 보건, 7. 교통, 12. 기타 항목이다.

이와는 달리 중산층과 표준가구의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4. 주거·수도광열, 8. 통신, 9. 오락·문화, 10. 교육, 11. 음식·숙박 항목들이다. 특히, 10. 교육에 대한 소비비중은 표준가구에 비해 중산층의 경우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것은 중산층에 맞벌이 가구가 상당수 포함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홀벌이 가구에 비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4. 주거·수도광열의 비중은 2005년 이후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이해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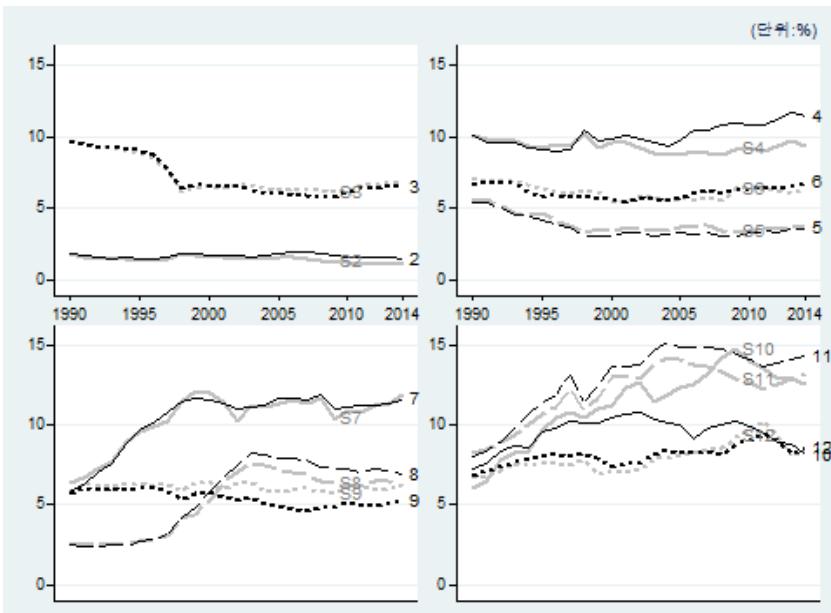
수 있다. 한편, 8. 통신과 11. 음식·숙박에 대한 비중은 중산층 가구가 표준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9. 오락·문화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표 2-4〉 소득계층별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 비중 추이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상위층	24.5	19.1	14.8	13.1	12.5	12.7
중산층	30.2	22.8	18.6	15.7	15.1	15.6
하위층	33.8	28.3	24.3	22.6	23.4	24.4
표준가구	30.1	22.9	18.4	15.1	14.1	14.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8) 중산층 소비구조 변화(1990~2014)



주: 1)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주류·담배, 3. 의류·신발, 4. 주거·수도광열, 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6. 보건, 7. 교통, 8. 통신, 9. 오락·문화, 10. 교육, 11. 음식·숙박, 12.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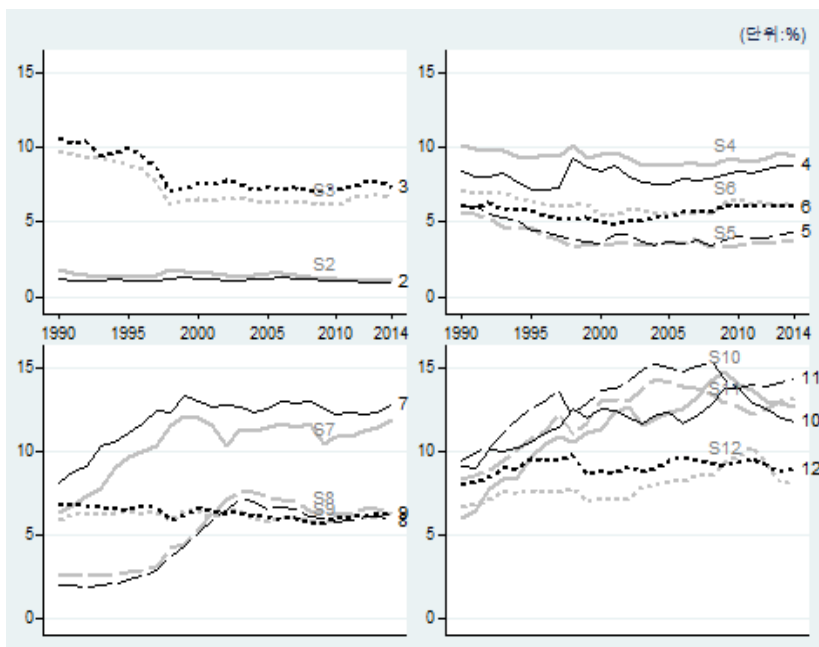
2) 'S(숫자)'는 표준가구의 각 소비항목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정리하면, 표준가구가 소득 수준과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볼 때 2000년 이전에는 중산층의 전형적인 형태(홀벌이면서 1~2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라고 할 수 있지만, 점차 그 대표성이 희석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은 유사할지라도 가구의 인적구성 등 다른 경제·사회적 특성들이 상이해짐으로써 소비구조가 다양화된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9]는 상위층의 소비구조를 표준가구와 비교한 결과이다. 흥미로운 것은 각 소비 항목별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소비구조 변화 추이는 중산층에 비해 상위층의 경우 표준가구와 상대적으로 더 유사하다는 점이다. 3. 의류·신발, 7. 교통, 10. 교육 및 12. 기타의 경우 표준

(그림 2-9) 상위층 소비구조 변화(1990~2014)



주: 1)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주류·담배, 3. 의류·신발, 4. 주거·수도광열, 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6. 보건, 7. 교통, 8. 통신, 9. 오락·문화, 10. 교육, 11. 음식·숙박, 12.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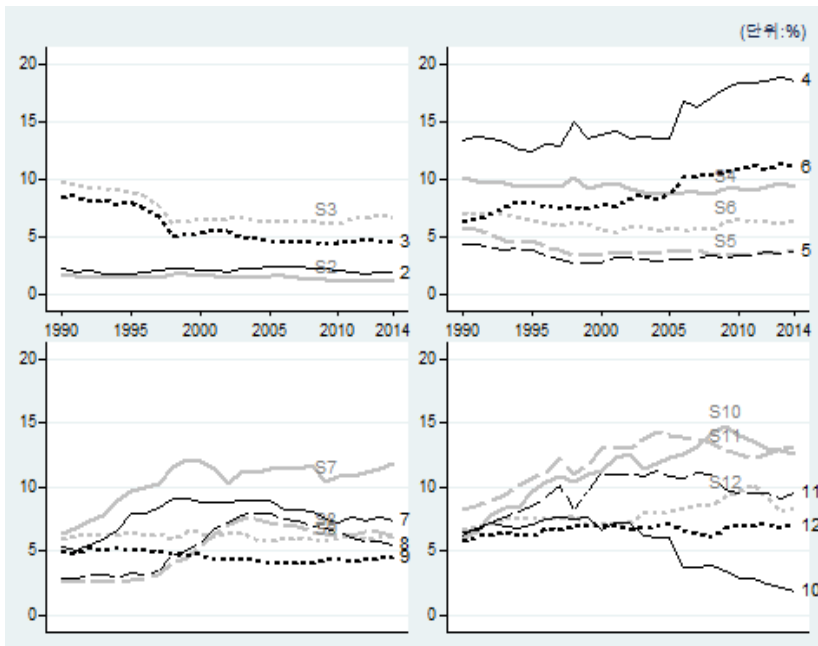
2) 'S(숫자)'는 표준가구의 각 항목별 소비비중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가구에 비해 가구 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지만 전반적인 추이는 상당히 유사한 편이다. 다만, 10. 교육과 12. 기타는 2000년 이전에는 상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으나, 이후 그 간격이 축소되거나 역전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소득 수준으로 볼 때 과거의 전형적인 가구형태(홀벌이 부부+자녀)가 과거에는 중산층에 가까웠지만 최근에는 상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소비구조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0]을 보면, 소득기준으로 볼 때 하위층의 소비구조는 표준가구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 주거·수도광열에 대한 소비 비중에서 하위층의 비중은 표준가구에 비해 5%p 이상 높은 것

(그림 2-10) 하위층 소비구조 변화(1990~2014)



주: 1)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주류·담배, 3. 의류·신발, 4. 주거·수도광열, 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6. 보건, 7. 교통, 8. 통신, 9. 오락·문화, 10. 교육, 11. 음식·숙박, 12. 기타.

2) 'S(숫자)'는 표준가구의 각 항목별 소비비중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은 물론, 최근 크게 그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6. 보건과 1. 식료품(표 2-4 참조)에 대한 소비 비중 역시 표준가구와는 달리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에 앞의 세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의 비중은 표준가구에 비해 적은 편이다. 특히 교육과 통신의 비중은 그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하위층의 경우 생활필수품과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2-5>, [그림 2-11]과 [그림 2-12]는 가구원수가 1~2명인 가구의 소비구조를 표준가구와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1인 혹은 2인 가구의 소비구조는 하위층의 소비구조와 유사한 편이다. 즉, 생활필수품에 가까운 소비의 비중은 높은 반면, 다른 항목들의 비중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소비구조의 유사성을 통해 하위층에 속하는 상당수의 가구가 1인 혹은 2인으로 구성된 노인 혹은 청년층 가구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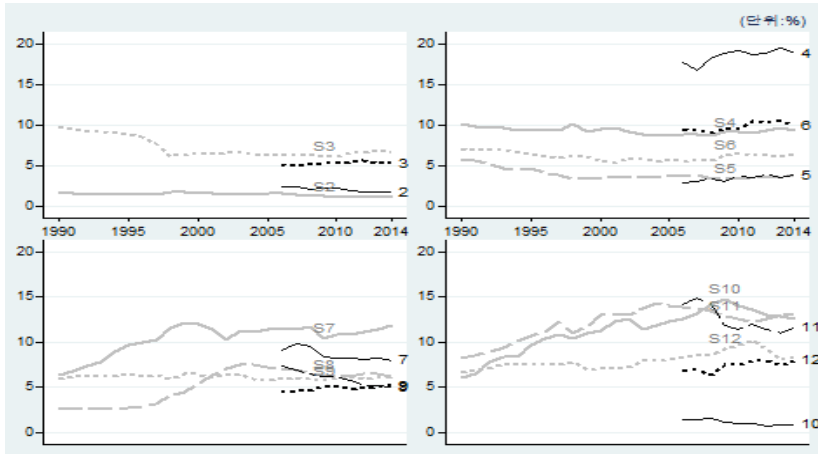
한편, <표 2-6>은 가계동향조사에서 정의하는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 가구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인의 연령기준이 2003년에 변경되었다는 점과 세 가구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이 2009년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노인가구, 맞벌이 가구, 모자가구를 각각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는 2009년의 기준을 이전 자료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노인가구의 연령기준을 60세로 모든 연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

<표 2-5> 1인·2인 가구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 비중 추이

구분	1990	1995	2000	2006	2010	2014
1인 가구	-	-	-	19.2	20.7	21.8
2인 가구	27.5	23.7	21.3	20.5	20.2	19.7
표준가구	30.1	22.9	18.4	14.9	14.1	14.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11) 1인 가구 소비구조 변화(199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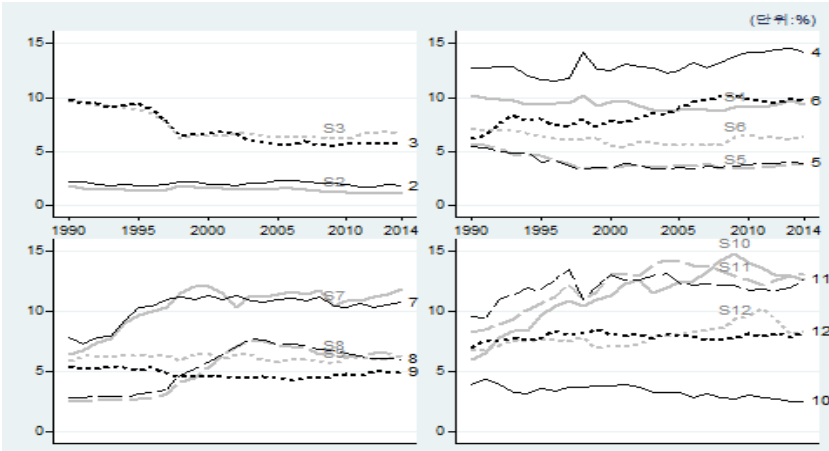


주: 1)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주류·담배, 3. 의류·신발, 4. 주거·수도광열,
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6. 보건, 7. 교통, 8. 통신, 9. 오락·문화, 10. 교육,
11. 음식·숙박, 12. 기타.

2) 'S(숫자)'는 표준가구의 각 항목별 소비비중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12) 2인 가구 소비구조 변화(1990~2014)



주: 1)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주류·담배, 3. 의류·신발, 4. 주거·수도광열,
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6. 보건, 7. 교통, 8. 통신, 9. 오락·문화, 10. 교육,
11. 음식·숙박, 12. 기타.

2) 'S(숫자)'는 표준가구의 각 항목별 소비비중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2-6〉 가계조사의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 가구

연 도	변 경 내 용
'90~'02년	우선순위(맞벌이>노인>모자)에 따라 하나의 항목을 선택 - 노인가구: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구원을 포함하지 않고,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인 가구 - 모자가구: 가구주가 여성이고, 가구원이 18세 미만의 자녀만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가구주가 직업이 있고 동거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맞벌이로 인정 - 일반가구: 위의 가구 이외의 일반 가구
'03년~	- 노인가구 기준연령 변경: 60세→65세로 변경
'09년~	- 노인가구, 맞벌이 가구, 모자가구를 각각 별도 항목으로 구성. 일반가구는 노인·모자·맞벌이가 아닌 가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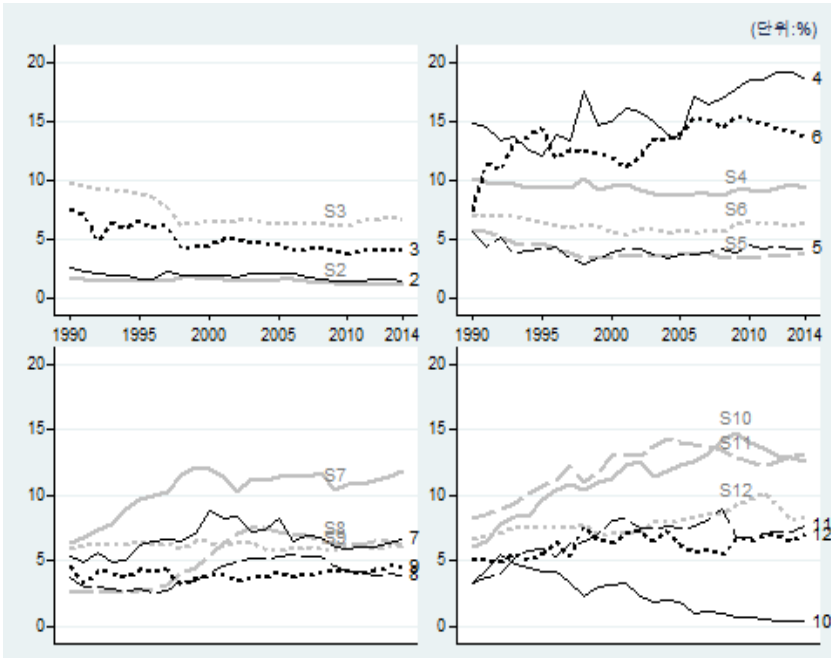
〈표 2-7〉과 [그림 2-13]을 통해 노인가구의 소비구조를 표준가구와 비교해 보면, 1. 식료품·비주류음료, 4. 주거·수도광열, 6. 보건 항목과 같은 생활필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이 표준가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2. 주류·담배, 3. 의류·신발, 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비중은 표준가구와 유사하다. 그리고 나머지 6개 항목들(7. 교통, 8. 통신, 9. 오락·문화, 10. 교육, 11. 음식·숙박, 12. 기타)은 표준가구에 비해 매우 낮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패턴은 저소득 가구의 패턴과 일견 유사하지만, 그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향후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노인가구의 소비구조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7〉 노인·맞벌이 가구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 비중 추이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노인가구	36.8	32.5	28.6	29.2	28.3	27.8
맞벌이가구	28.5	20.8	16.7	14.9	14.1	13.9
표준가구	30.1	22.9	18.4	15.1	14.1	14.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13) 노인가구 소비구조 변화(199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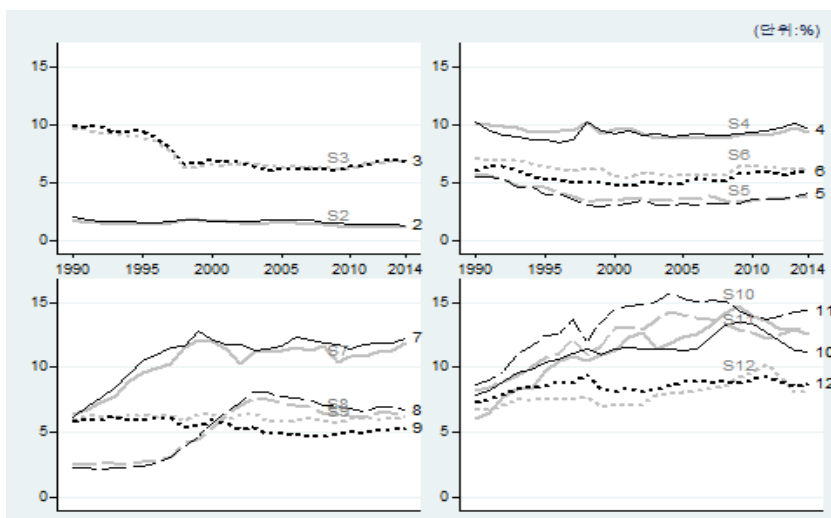


주: 1) 2. 주류·담배, 3. 의류·신발, 4. 주거·수도광열, 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6. 보건, 7. 교통, 8. 통신, 9. 오락·문화, 10. 교육, 11. 음식·숙박, 12. 기타
2) 'S(숫자)'는 표준가구의 각 항목별 소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한편, 맞벌이 가구의 소비구조는 홀벌이인 표준가구와 비교할 때 대부분의 소비항목에서 그 비중과 추이 모두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표 2-7>과 [그림 2-14] 참조). 다만, 7. 교통, 8. 통신, 11. 음식·숙박에 대한 소비 비중은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반면, 6. 보건, 9. 오락·문화, 10. 교육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편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가구유형 내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의 차이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표준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외식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도 부합된다.

(그림 2-14) 맞벌이 가구 소비구조 변화(1990~2014)



주: 1)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주류·담배, 3. 의류·신발, 4. 주거·수도광열, 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6. 보건, 7. 교통, 8. 통신, 9. 오락·문화, 10. 교육, 11. 음식·숙박, 12. 기타.

2) 'S(숫자)'는 표준가구의 각 항목별 소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제4절 저임금서비스 소비 부문의 변화

장기적인 인구·가구구조의 변화가 소비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소비수요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생산을 변환시킴으로써 산업·고용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김동구·박선영, 2013; 최바울, 2013; 황수경, 2013; 황상필, 2009). 이를 위해 황상필(2009)은 소비목적에 따른 12개 항목별 가계지출의 비중 변화를 전망하고, 산업연관표의 15개 부문에 연계하여 부문별로 2020년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과 취업유발규모를 제시하였다. 황수경(2013)은 Kalwij et al.(2007)의 분류방법에 따라 소비지출을 20개 소비항목으로 구분하여 가구의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인구·가구구조의 변화가 향후 서비스 분야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때 분

류한 20개 소비항목을 보면, 가계조사에서 제공하는 12개 대분류 항목 내에 존재하는 99개의 중분류 항목을 재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분류 항목으로 보면 재화와 서비스로 구성된 주거가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증가가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최바울(2013)은 16개 소비항목에 대한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있다. 즉, 12개 대분류 항목 중 서비스 부문 일부를 세분하여 소비지출 구성을 재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조사의 349개 소분류 항목을 바탕으로 Lindley and Machin(2013)에 기초한 저임금 서비스 분류에 따른 항목들을 저임금 서비스 소비 분야로 정의한다. <표 2-8>은 저임금 서비스 소비 부문으로

<표 2-8> 저임금 서비스 항목에 대한 소비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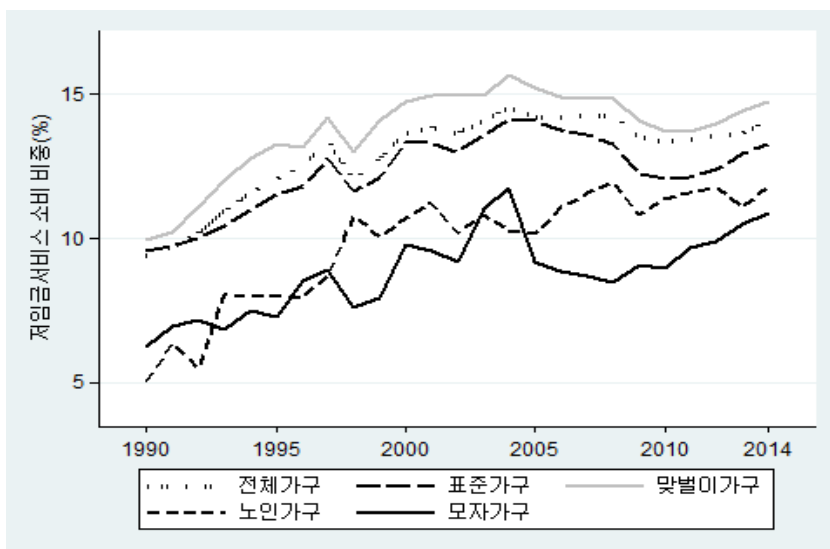
	항목	항목설명(가계조사)
저 임 금 서 비 스	외식비	일반식당, 배달음식, 이동식음식점, 패스트푸드
	주점·커피숍	일반주점, 호프, 나이트클럽, 커피숍, 다방, 생과일주스 전문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술, 음료와 더불어 식사를 제공받는 데에 지불한 비용
	의복수선및세탁료	의복의 재봉, 수선 및 세탁을 위해 지출한 비용
	기타의복관련서비스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의복관련서비스
	신발관련서비스	신발의 수선, 재봉 또는 세탁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설비및수리서비스	주택, 정원, 담장, 상하수도, 난방 등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한 교체, 신규, 수리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
	기타주거서비스	위의 항목(주택유지 및 수선 등에 분류되지 않은 주거관련 서비스)
	실내장식관련서비스	가구수선, 실내장식관련서비스
소 비 항 목	가정용섬유관련서비스	침구, 커튼, 수건, 기타섬유에 대한 수선, 세탁 등 관련 서비스
	가정용기기및가전서비스	가정용기기의 수리·설치·관리 및 렌탈서비스
	식품관련서비스	사업자나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식료품 가공관련 서비스(가사서비스 항목에 있는 항목임)
	가사사용인급료	취사, 세탁, 청소, 재봉 등 가사에 관련된 일을 타 가구의 가구원을 고용해서 직접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이미용료	이발소 또는 미용실을 이용하고 지출한 비용
기타이미용서비스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이미용서비스	

자료: Lindley and Machin(2013).

분류한 14개 소분류 항목이다. 이들 서비스 지출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던, 또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던 자체적인 생산활동이 외부화되었다는 의미에서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이라 부를 수 있다. 이들 항목들에 대한 소비지출액이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다.¹²⁾

[그림 2-15]에서 보면 가구 유형별로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저임금 서비스 소비는 증가하는 추이다. 예를 들어, 25년 분석기간 동안 가구소비지출에서 저임금서비스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적으로 약 5%p 정도 증가하였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소비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은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경우에도 1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그림 2-15) 가구 유형별 저임금 서비스 수요의 변화(1990~201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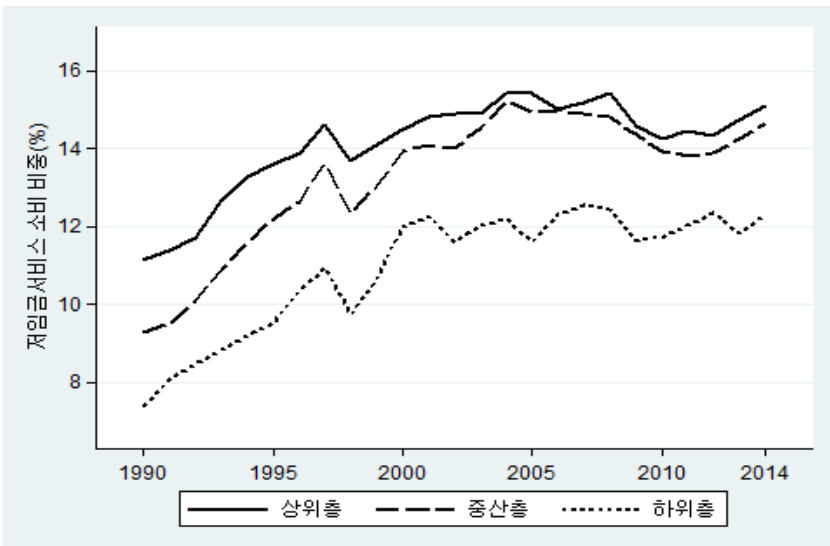
12)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소비지출 항목 중 저임금 서비스 소비 항목으로 분류하기에는 그 정의가 모호하거나 더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한 항목들이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절에서는 이들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데, 구체적인 항목들은 기타보건의료서비스, 병원입원치료비, 팀(유흥비) 및 기타서비스 및 개인용품서비스 항목이다.

소득계층별로 볼 때, 하위층의 저임금 서비스 소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중산층과 상위층의 차이는 확인하기 어렵다. 즉, 단순히 소득 수준만으로 저임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의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상위층 내에서 가구주의 학력을 구분(대졸 이상=고학력자, 대졸 미만=저학력자)한 결과, 상위층 내 고학력자가 다소 그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예상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그림 2-17 참조).

[그림 2-18]을 통해 각 소득계층 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위층(A)과 하위층(C)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저임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크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산층(B)의 경우에는 시기별로 우열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맞벌이 여부가 저임금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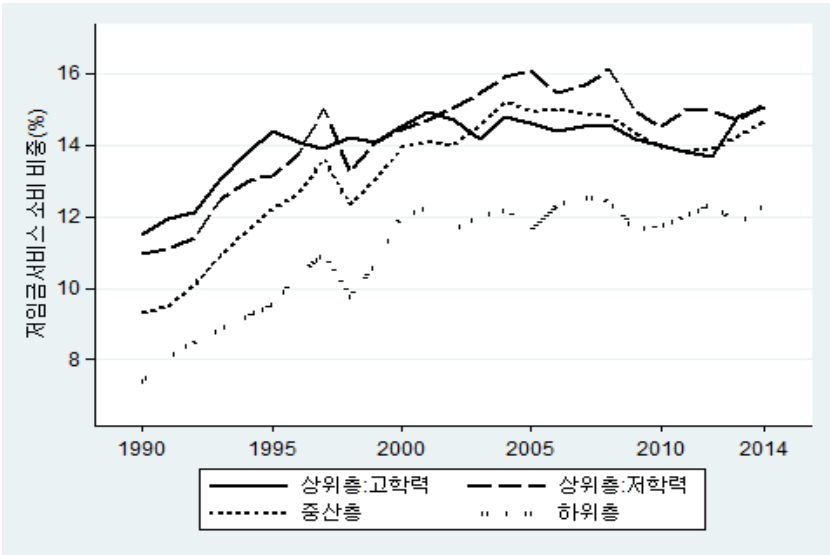
한편, 노동시장 양극화와 그에 따른 저임금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현상이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Lindley and Machin, 2013 등).

(그림 2-16) 소득계층별 저임금 서비스 수요의 변화(199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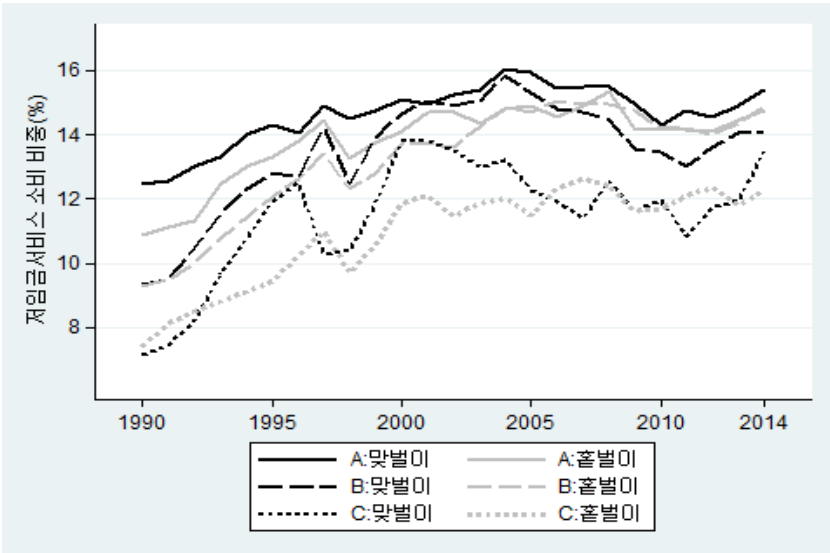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17) 상위 소득계층의 학력별 저임금 서비스 수요의 변화(1990~201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18) 맞벌이 가구의 저임금 서비스 수요의 변화(199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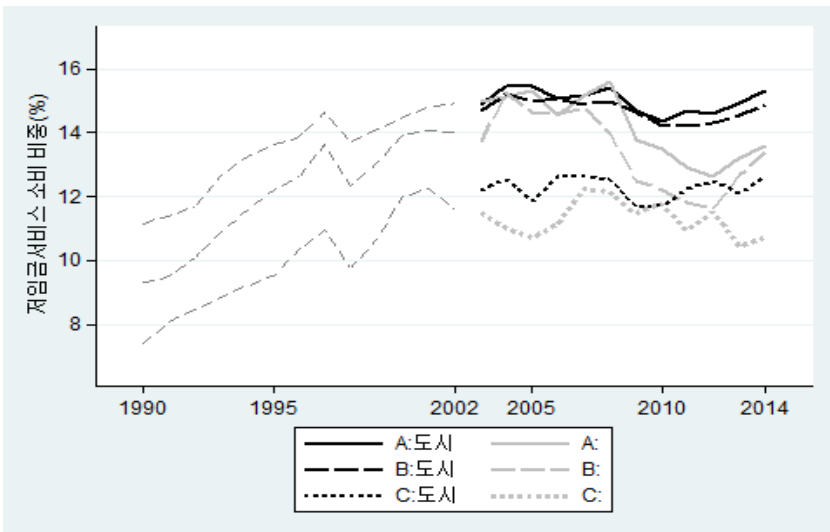


주: A는 상위층(중위소득 2/3 초과), B는 중산층, C는 하위층(중위소득 2/3 미만)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이에 [그림 2-19]에서는 소득계층과 거주지역¹³⁾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구를 분류하고 각 가구 유형별로 저임금 서비스 수요를 비교·제시한다. 이를 보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그에 따른 저임금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현상의 지역적 특성이 한국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일지라도 거주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저임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올수록 더욱 뚜렷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산층 도시지역 거주 가구(B: 도시)의 해당 수요는 비도시지역 상위층(A:) 가구에 비해서도 높다. 또한 하위층 도시지역 거주 가구(C: 도시)의 수요 역시 비도시지역 상위층(A:)과 중산층(B:)의 수요와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9) 도시지역의 저임금 서비스 수요의 변화(1990~2014)



주: A는 상위층(중위소득 2/3 초과), B는 중산층, C는 하위층(중위소득 2/3 미만)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13) 가계조사는 2002년까지는 도시거주(=동부) 가계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2003년부터 읍면부를 포함한 전국의 가계를 대상으로 확대·조사함으로써, 그 명칭을 도시가계조사에서 가계조사로 변경하였다.

제 3 장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

제1절 머리말

2장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가구 소비 지출의 항목별 추세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추세를 인구학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3장에서는 초점을 가사생산대체서비스로 좁혀 맞벌이 증가나 불평등 변화와 같이 본 연구가 관심을 두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이 장에서는 먼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관련 기초통계를 정리한 후 엔겔 곡선을 추정할 것이다. 여기서 얻은 파라미터를 이용해 소득 탄력성을 계산하여 가사생산대체서비스가 소득이 증가할 때 지출이 감소하는 열등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소득이 증가한 만큼은 아니지만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는 필수재 성격인지, 아니면 소득 증가보다 더 큰 탄력성을 가지는 사치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이는 가사생산대체서비스의 소득과의 관련성을 잘 드러내는 분석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시간에 따른 가사생산대체서비스의 중요도 변화에 이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불평등이나 인구특성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미치고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분해(decomposition) 분석해 볼 것이다.

지출 항목의 소득, 인구학적 구성과의 관련성은 보통 엔겔 곡선(Engel

curve)의 추정을 통해 분석되어 왔다. 이하의 설명은 Blow, Kalwij & Ruiz-Castillo(2004)를 따른다.

$$s_{ikt} = \alpha_{kt0} + \gamma_{kt}x + \beta_k \ln(w) + e_{ikt} \quad (3-1)$$

식 (3-1)은 총 지출 중 특정 소비항목 k의 몫이며, x_{it} 는 인구학적 특성 등 가구의 특성 변수이며, w_{it} 는 가구 총지출액 또는 가구소득 등 가구의 예산(budget) 증감과 관련된 변수이다. 소득에 대한 지출 탄력성이 음(-)이면 열등재, 소득 탄력성이 양수(+)이지만 1보다는 작으면 필수재, 1보다 크면 사치재로 분류된다. 식 (3-1)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몫을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한 후 소득 탄력성을 계산하면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이 소득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사치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량을 q_h 라고 하면 식 (3-2)가 바로 소득 탄력성이 된다. 식 (3-2)는 Blow, Kalwij & Ruiz-Castillo(2004)에 따르면 식 (3-1)의 파라미터를 이용해 식 (3-3)처럼 표현될 수 있다.

$$\epsilon_q = \frac{\partial q_h}{\partial w} \frac{w}{q_h} \quad (3-2)$$

$$\epsilon_q = 1 + \frac{\beta_k}{s_k} \quad (3-3)$$

Blow, Kalwij & Ruiz-Castillo(2004)는 개별 소비항목의 지출 증감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변화의 기여분을 계산할 수 있는 분해방법도 제시하였다. 특정 소비항목 k의 두 기간 간 지출 몫 변화를 $s_{k2} - s_{k1}$ 이라고 하자. 그러면, 차이는 식 (3-4)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begin{aligned} s_{k2} - s_{k1} &= (\widehat{\alpha}_{k2} - \widehat{\alpha}_{k1}) + (\widehat{\gamma}_{k2}x_2 - \widehat{\gamma}_{k1}x_1) \\ &\quad + (\widehat{\beta}_{k2}\overline{\ln(w_2)} - \widehat{\beta}_{k1}\overline{\ln(w_1)}) \end{aligned} \quad (3-4)$$

계수를 1기 기준으로 보면, 식 (3-4)를 다음과 같이 변형해 분해식을

만들 수 있다.

$$s_{k2} - s_{k1} = \widehat{\gamma}_{k1}(x_2 - x_1) + \widehat{\beta}_{k1}(\overline{\ln(w_2)} - \overline{\ln(w_1)}) + R \quad (3-5)$$

위 식 우변의 첫 번째 항이 바로 계수를 1기 기준으로 볼 때 인구학적 구성 변화가 두 기간 간 소비항목 k의 지출 비중 변화에 기여한 부분을 보여주는 항이다. 두 번째 항은 소득수준, 즉 지출 가능한 예산의 크기 변화가 소비항목 k의 지출 비중 변화에 기여한 부분을 보여준다. R은 선호, 소비항목 간 상대가격 변화 등 나머지 미관찰 요인들의 영향이다.

이 장에서 주로 관심 있는 인구학적 변화는 배우자인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고령가구 증가이다. 이를 위해 인구학적 변화 변수로 맞벌이 여부, 배우자 없는 1인 이상 가구, 노인가구, 모자가구 등 가구 특성과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자녀의 연령(6세 미만, 6~13세 미만, 13~20세 미만), 가구주를 제외하고 가구 내 7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지 여부를 통제하였다.

보통 엔젤 곡선을 추정할 때 설명변수로 들어가는 예산 가능액 w 는 개별 가구의 지출 총액의 로그가 이용되는 관행이 있지만, 여기서는 분석의 초점이 소득수준 및 소득불평등 내에서 해당 가구의 위치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출 총액 외에도 가구 시장소득, 가구 가처분소득, 가구의 소득수준(저소득/중간소득/고소득 여부), 가구주 근로(사업)소득, 배우자 근로(사업)소득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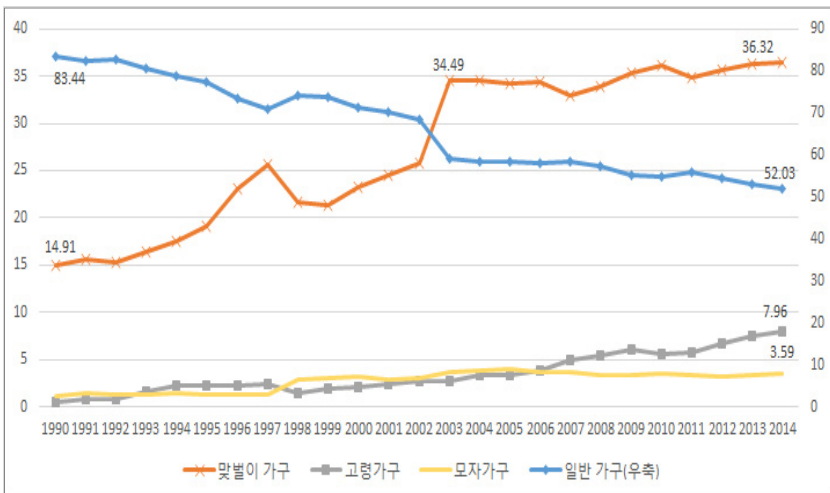
제2절 기초통계

2장에서 가구의 인구학적 변화는 주로 2010년 이후 전망 중심으로 통계치를 제시했으므로 여기서는 과거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보고하겠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원자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소비동향 관련 가장 대표적인 조사이면서 가계

부 기장방식이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가구소득 분배와 소득 동향의 대표조사로 이용된다. 하지만, 도시 단위를 넘어 전국단위 조사로 개편된 것이 2003년이며, 1인 이상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도 2006년부터이다.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의 자세한 인적사항 정보를 수집한 지도 오래되지 않아 장기간의 동향을 분석하기엔 한계가 있다. 2장의 분석에 따르면,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은 1990년대에 대폭 확대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대략 2%p 남짓 증가하였다. 하지만, 자료의 세부적인 조사 범위 문제로 1990년대에는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구학적 변화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으므로, 2000년대에 한해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먼저 가구 유형별 비중 추이를 보면,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령가구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일반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이래 통상적인 관념보다는 아주 완만한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가구 유형별 비중 추이



주: 2003년에 수치가 다소 많이 변화하는데, 이는 통계자료 개편의 영향으로 보임.
도시거주 2인 이상 가구에 한정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3-1〉 가구유형별 비중 추이

(단위:%)

	유배우 비맞벌이	맞벌이 가구	무배우 2인 이상	고령 가구	모자 가구	1인 가구	
2003	47.0	35.2	10.6	3.6	3.6	-	100.0
2004	46.6	34.5	10.8	4.2	4.0	-	100.0
2005	46.3	34.0	11.5	4.4	3.8	-	100.0
2006	45.5	34.3	11.8	4.8	3.7	-	100.0
2007	45.5	32.9	12.2	5.7	3.7	-	100.0
2008	44.8	34.2	11.9	5.9	3.3	-	100.0
2009	43.4	36.0	11.1	6.2	3.3	-	100.0
2010	43.2	36.9	10.7	5.7	3.6	-	100.0
2011	44.9	35.9	9.7	6.0	3.5	-	100.0
2012	43.5	36.4	9.9	6.8	3.3	-	100.0
2013	42.2	37.2	9.6	7.6	3.5	-	100.0
2014	40.8	37.1	10.4	8.1	3.5	-	100.0
2006	38.2	28.8	9.9	4.1	3.1	16.0	100.0
2007	37.6	27.2	10.1	4.7	3.0	17.6	100.0
2008	35.5	27.1	9.5	4.7	2.6	20.6	100.0
2009	34.5	28.7	8.8	4.9	2.7	20.4	100.0
2010	34.4	29.4	8.5	4.5	2.8	20.4	100.0
2011	35.8	28.7	7.8	4.8	2.8	20.1	100.0
2012	34.7	29.1	7.9	5.5	2.7	20.3	100.0
2013	33.4	29.5	7.6	6.0	2.8	20.7	100.0
2014	31.7	28.9	8.1	6.3	2.7	22.3	100.0

주: 표 윗부분의 2003~14년은 전국 2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통계이며, 표 아랫부분의 2006~14년은 전국 1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통계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3-1〉은 전국 2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2003~14년)와 전국 1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2006~14년)에 대해 유사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역시 배우자 있는 맞벌이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증가세가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고령가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비중은 2008~13년간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2006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증가한 모습이다.

2장에서 본 향후의 장기 전망치나 장기 과거 추세로 보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고령화 같은 추세가 뚜렷이 보이지만, 일시적 국면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이다.

<표 3-2>는 가구원 연령 구성별 비중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6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중은 1990년에는 34.3%에 달했지만, 자녀수 감소, 만혼화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줄어 2014년에는 20%로 감소했다. 이는 6세 이상 13세 미만이나 13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보아도 유사하게 감소추이가 나타난다. 반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구주를 제외한 7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중은 2000년 7.3%에서 꾸준히 비중이 증가해 2014년 10.7%에 도달한 상태이다.

가사생산대체서비스와 관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는 대체로 집안 일을 외부 조달하는, 그래서 관련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반면,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감소는 관련 서비스 지출의 장기적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사생산대체서비스가 사치재 특성을 가진다면, 소득이 적은 고령가구의 증가는 관련 지출 감소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에 고령층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집 밖에서 조달 가능하다면, 피부양 고령가족의 증가는 관련 지출 증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 이들 각 인구학적 변화 요인들이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에 작용할지는 검증의 문제이다.

이 장의 분석에서 가사생산대체서비스는 2장보다는 다소 더 넓게 정의된 Mazzolari & Ragusa(2013)의 연구를 따른다. 3장 부록의 <부표>에 위 연구와 우리나라 가계동향조사의 대응항목을 정리하였다. 2장의 정의와 주된 차이는 보육 및 비거주복지시설 관련 지출이 2장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여기는 포함된다는 점에 있다. 육아의 시장 조달은 결국 보육시설의 이용이고, 고령층 돌봄의 시장 조달은 주간요양시설 같은 외부 복지시설의 이용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육아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가구 지출이 2012년부터 급속히 줄게 되고, 고령층 돌봄은 국민장기요양보험 같은 사회보험 지출과 연관성이 깊어 소비자자료로는 최근 추

이가 잘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분석에서 주의할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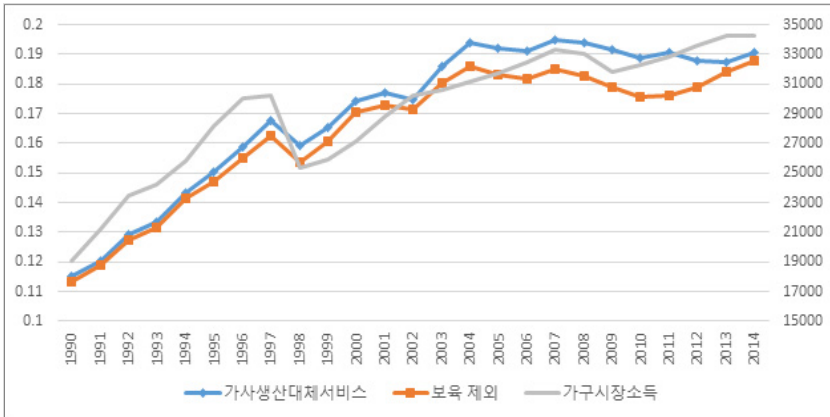
〈표 3-2〉 가구원 연령 구성별 비중 추이

(단위:%)

	6세 미만 가구원 있는 가구 비중	6~13세 미만 가구원 있는 가구 비중	13~20세 미만 가구원 있는 가구 비중	70세 이상 가구원 있는 가구 비중
1990	34.3	43.5	31.8	
1991	32.2	44.7	32.3	
1992	33.6	43.4	30.4	
1993	34.5	41.1	27.0	
1994	33.2	38.6	25.9	
1995	32.0	37.5	25.8	
1996	30.1	34.8	26.9	
1997	28.3	31.9	28.0	
1998	32.5	29.4	28.0	
1999	29.9	30.0	28.1	
2000	26.4	29.4	27.8	7.3
2001	24.4	30.4	26.6	7.2
2002	22.9	29.4	25.3	7.9
2003	25.8	32.3	26.1	7.4
2004	23.9	31.9	25.8	7.2
2005	22.9	30.1	26.1	7.3
2006	20.9	28.9	26.0	8.5
2007	19.0	28.2	27.1	9.0
2008	20.1	27.2	28.0	9.6
2009	19.0	26.7	27.2	10.2
2010	19.5	26.6	27.4	10.1
2011	19.6	26.8	26.4	9.7
2012	19.2	25.8	26.7	10.4
2013	19.3	25.3	25.5	10.6
2014	20.0	23.8	24.9	10.7

주: 도시거주 2인 이상 가구원 가구에 한정된 분석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2]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몫과 연간소득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2]는 보육 및 비거주 복지시설 관련 지출이 포함될 경우와 아닌 경우의 가사생산대체서비스의 총 지출 중 몫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추세와 함께 그림을 그렸는데, 대체로 시장소득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고,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소득과의 동조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다만, 2004년경까지 증가하던 지출 몫은 그 이후 등락을 보이고 있다. 보육 및 비거주 복지시설 관련 지출을 제외할 경우엔 대략 금융위기 직후까지 소폭 감소했다가 2010년 이후 증가해 2014년의 지출 몫이 역대 가장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할 경우 아직까지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무상보육으로 인해 보육 지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보육을 제외하는 경우와 포함하는 경우의 지출 몫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과거에는 보육을 제외해도 수준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2003년 정도를 기점으로 보육을 포함할 때와 아닐 때의 지출 몫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이는 외부 보육시설을 통한 육아의 외부화가 대략 2003년 정도를 기점으로 급격히 진전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가구소득과 대체로 강한 동조성을 보인다는 것은 앞으로 가구 소득수준의 증대가 이 지출몫의 꾸준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후 분석할 회귀분석에서 더 깊이 다루겠다.

다음으로 가구 인구학적 특성별로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몫 차이를 검토해 보겠다. 2장에서 이미 주된 내용을 다루었으므로,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정의를 달리할 때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에서 간단히 분석해 보겠다.

2014년 기준 가구 유형별로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20%로 가장 높고, 모자가구 15.6%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노인가구도 15.9%로 낮은 편이며, 배우자 있는 외벌이 가구는 맞벌이 가구보다는 낮지만 노인가구보다는 높은 18.5%를 지출했다. 배우자 있는 외벌이 가구의 경우 과거에는 중간소득 가구 가능성이 높았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고소득 가구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2장의 분석, 그리고 소득 증가에 따라 지출 몫이 증가하는 [그림 3-2]를 종합해 생각해 보면 외벌이 가구일지라도 소득 증가로 인해 이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하게 된 것일 수 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에 비해서는 고소득 가구에서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기준 저소득 가구는 총 지출 중 16.4%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이었으며, 고소득 가구는 20.9%였다. 그런데, 중간소득 가구는 고소득 가구보다 약간 낮은 19.6%를 기록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가구 유형과 무관하게 저소득

〈표 3-3〉 가구 유형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

(단위: %)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	
맞벌이	20.0	(7.9)
배우자 있는 외벌이	18.5	(7.4)
부부 아닌 2인 이상 가구	20.1	(9.0)
노인가구	15.9	(9.3)
모자가구	15.6	(6.1)
1인 가구	17.9	(11.9)
전체	18.7	(9.0)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3-4〉 가구 유형별, 가구 소득 수준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

(단위: %)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전체
맞벌이	16.0	19.5	21.3	20.0
	(8.2)	(7.8)	(7.8)	(7.9)
배우자 있는 외벌이	16.6	18.7	19.7	18.5
	(7.9)	(7.0)	(8.3)	(7.4)
부부 아닌 2인 이상 가구	16.3	21.3	23.7	20.1
	(8.8)	(8.7)	(8.2)	(9.0)
모자 가구	14.2	15.9	16.5	15.6
	(6.0)	(5.7)	(6.9)	(6.1)
1인가구	16.8	22.6	22.2	20.8
	(10.2)	(10.7)	(10.0)	(10.8)
전체	16.4	19.6	20.9	19.4
	(8.8)	(8.1)	(8.3)	(8.4)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가구의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인 가구의 경우 중간소득 가구의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이 고소득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차이가 있었다.

고속런 고임금 가구일수록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고졸 미만 가구 18.6%, 대졸 이상 가구 20.0%로 나타나 대체로 기대에 부합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3-5〉 가구주 학력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

(단위: %)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	
고졸 미만	18.6	(9.4)
고졸	19.1	(8.2)
전문대졸	19.8	(8.0)
대졸 이상	20.0	(8.1)
전체	19.4	(8.4)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학력별, 가구 소득수준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을 보면 역시 고소득 가구에서 학력 불문하고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연령 구성별로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 추이를 계산해 보았다. 가구에 6세 미만 가구원이 있으면 과거에도 미미하게 비중이 높았지만, 이 차이는 2003년 이전에는 0.3%p 수준의 차이였다면, 그 이후로는 계속 벌어져서 2010년에는 5%p까지 비중이 차이났다. 이 차이는 무상보육이 확대된 2012년부터 크게 좁혀져 2014년에는 1.5%p 차이까지 좁혀진 상태이다.

반면에 6세 이상 13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것은 이 소비 비중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표에 보고되어 있지는 않은데, <표 3-7>의 6~13세 미만 가구원 '없음'에는 6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지만, 6세 미만 가구원이 없는 경우로만 한정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¹⁴⁾

<표 3-6> 가구주 학력별, 가구 소득 수준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

(단위: %)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전체
고졸 미만	15.1	20.2	21.7	18.6
	(8.8)	(9.3)	(8.2)	(9.4)
고졸	16.8	19.3	20.6	19.1
	(8.7)	(7.8)	(8.8)	(8.2)
전문대졸	16.8	19.9	21.1	19.8
	(7.6)	(8.0)	(7.5)	(8.0)
대졸 이상	18.6	19.7	21.0	20.0
	(8.9)	(7.9)	(8.1)	(8.1)
전체	16.4	19.6	20.9	19.4
	(8.8)	(8.1)	(8.3)	(8.4)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14) 표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13~20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경우도 6~13세 미만 가구원의 경우와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왔다.

가구주가 25세 이상 60세 미만인 가구에 한해 7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어떤지도 분석해 보았다. 과거에는 70세 이상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가구가 더 대체서비스 소비 비중이 낮았으며, 최근 몇 년간은 거의 동일한 값을 보이고 있다. 70세 이상 가구원이 있으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비중이 크지 않을까 생각되었지만, 실제 지출 비중으로 보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표 3-7〉 가구원 연령 구성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몫 추이

(단위: %)

	6세 미만 가구원		6~13세 미만 가구원		70세 이상 가구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1990	11.3	11.9	12.3	10.4		
1991	11.9	12.2	12.7	11.1		
1992	12.7	12.9	13.6	11.7		
1993	13.7	13.9	14.7	12.4		
1994	14.4	14.7	15.5	12.9		
1995	15.1	15.8	16.3	13.8		
1996	15.8	16.4	17.0	14.2		
1997	16.7	17.8	17.9	15.2		
1998	16.0	16.5	16.6	15.2	16.1	15.6
1999	16.6	17.0	17.0	15.8	16.8	15.9
2000	17.4	17.9	17.9	16.6	17.8	17.5
2001	17.8	18.1	18.3	16.9	18.1	16.4
2002	17.5	17.7	17.9	16.7	17.8	17.0
2003	18.7	19.4	19.2	18.2	18.9	18.3
2004	19.2	20.7	19.8	19.0	19.9	18.4
2005	18.8	21.2	19.5	18.9	19.8	18.5
2006	18.5	21.7	19.4	18.7	19.7	18.9
2007	18.3	22.7	19.3	18.8	20.2	18.9
2008	18.6	22.8	19.7	18.7	20.0	19.5
2009	18.3	22.7	19.3	18.6	19.7	18.9
2010	18.0	23.0	19.3	18.3	19.5	18.2
2011	18.2	23.1	19.6	18.1	19.7	19.1
2012	18.3	21.8	19.3	17.8	19.4	19.4
2013	18.6	19.9	19.3	17.5	19.1	19.2
2014	18.8	20.3	19.5	17.9	19.6	19.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제3절 지출과 인구학적 특성, 소득 간의 관계 추정과 분해분석

기초분석을 보면,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이 의미 있지만, 소득과 함께 움직이는 측면도 강하게 나타난다. 이 절에서는 각 요인들이 가사생산대체서비스와 갖는 관계를 좀 더 깊이 분석하겠다. 분석을 위해 추정하는 모형은 식 (3-1)이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조사의 확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기별로 이용할 수 있는 변수가 다르다. 이 절에서는 먼저 2014년을 기준으로 다양한 소득 기준별 회귀분석 결과를 확인한 후,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귀분석 결과 추이를 확인하겠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많은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2000년과 2014년 사이 대체서비스 비중 변화를 인구학적 특성 변화와 소득 변화로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¹⁵⁾

<표 3-8>은 식 (3-1)의 예산 변화를 포착하는 항목으로 시장소득, 총 지출액, 가처분소득, 가구주 근로(+사업)소득, 여성 배우자 근로(+사업)소득 등을 이용해 얼마나 결과들이 유사한지 확인한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소득의 계수값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비중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주 근로(+사업)소득 증가는 대체서비스 지출 비중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는데, 여성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여성의 소득 증가는 남편보다 절대값에서 더 큰 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가구주 교육의 영향을 보면, 가구주가 고졸 미만일 때에 비해 고졸이면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몫이 1%p 더 증가하며, 전문대졸이면 1.3%p, 대학 이상이면 1.6%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학력이 높을수록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몫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 가장 많은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2006년 이후이지만, 2006년 이후로는 대체서비스 소비 지출 비중 변화가 크지 않았으므로 2006년 이후 분해분석은 하지 않았다.

앞서 보았던 이론적 예측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소득변수로 남편 소득과 여성 배우자 소득을 동시에 통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몫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경우 모형에 따라 계수 추정치의 방향이나 통계적 유의도가 달라 분명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는 무상보육의 확대로 가구의 비용지출이 급감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분석에서 좀 더 다루어 보겠다.

다른 연령대 가구원의 존재는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이용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세 이상 자녀의 존재는 교육비 증가로 인해 다른 서비스 및 재화 지출 비중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본 연구의 주제는 아니므로, 여기서는 더 탐구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구형태의 효과를 보면, 맞벌이 가구는 기혼 외벌이 가구에 비해 예산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대체서비스 지출 몫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혼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 가구는 대체서비스 지출 몫이 모형에 따라 0.8~1.5%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없는 2인 이상 가구는 맞벌이 가구 못지않게, 분석모형에 따라서 대체서비스 지출 몫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부양가족을 데리고 있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일 것으로 추론된다. 고령가구는 모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 기혼 외벌이 가구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모자가구는 대체서비스 이용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자가구는 대체로 소득이 낮은 경향이 강해 대체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단독가구는 특성상 대체서비스 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계수의 방향도 모형에 따라 엇갈리게 도출되었다. 그런데, 이 모형은 가구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가구원수를 별도의 변수로 통제하고 있다. 이 변수가 단독가구의 특성을 잠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보기 위해 우측 하단에서 가구원수 변수를 뺀 모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단독가구는 기혼 외벌이 가구에 비해 1%p 정도 대체서비스 지출

〈표 3-8〉 2014년 기준 다양한 소득 기준별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소득=시장소득		소득=총지출		소득=가처분 소득			
ln(소득)	0.012	0.000	0.026	0.000	0.009	0.000		
가구주 교육								
고졸	0.010	0.000	0.006	0.026	0.012	0.000		
전문대졸	0.013	0.001	0.009	0.024	0.015	0.000		
대학 이상	0.016	0.000	0.010	0.002	0.020	0.000		
가구주 연령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6세 미만 가구원 있음	0.000	0.887	0.003	0.297	-0.004	0.209		
6~13세 미만 가구원 있음	-0.022	0.000	-0.021	0.000	-0.025	0.000		
13~20세 미만 가구원 있음	-0.024	0.000	-0.022	0.000	-0.027	0.000		
70세 이상 가구원 있음	-0.004	0.307	-0.002	0.493	-0.006	0.107		
가구형태(기혼 외벌이 기준)								
맞벌이	0.011	0.000	0.008	0.000	0.015	0.000		
배우자 없는 2인 이상 가구	0.015	0.000	0.017	0.000	0.015	0.000		
고령가구	0.003	0.535	0.004	0.444	-0.001	0.794		
모자가구	-0.026	0.000	-0.026	0.000	-0.025	0.000		
단독가구	-0.004	0.454	-0.001	0.909	-0.006	0.241		
ln(가구원수)	-0.015	0.001	-0.021	0.000	-0.010	0.038		
상수항	0.120	0.000	-0.011	0.501	0.115	0.000		
	소득=남편 근로(사업)소득		소득=남편 근로(사업)소득		소득=시장소득			
ln(소득)	0.011	0.000	0.007	0.013	0.012	0.000		
배우자 근로(사업)소득			0.011	0.000				
가구주 교육								
고졸	0.005	0.113	0.000	0.951	0.009	0.001		
전문대졸	0.006	0.104	0.008	0.278	0.013	0.001		
대학 이상	0.009	0.004	0.001	0.900	0.016	0.000		
가구주 연령	-0.001	0.000	0.000	0.707	-0.001	0.000		
6세 미만 가구원 있음	-0.001	0.874	0.024	0.000	-0.004	0.143		
6~13세 미만 가구원 있음	-0.024	0.000	-0.015	0.000	-0.027	0.000		
13~20세 미만 가구원 있음	-0.026	0.000	-0.018	0.000	-0.028	0.000		
70세 이상 가구원 있음	-0.009	0.023	-0.012	0.124	-0.006	0.079		
가구형태(기혼 외벌이 기준)								
맞벌이	0.014	0.000			0.011	0.000		
배우자 없는 2인 이상 가구	0.020	0.000			0.017	0.000		
고령가구	0.002	0.708			0.008	0.088		
모자가구	-0.010	0.131			-0.021	0.000		
단독가구	0.004	0.500			0.010	0.001		
ln(가구원수)	-0.010	0.044	-0.018	0.013				
상수항	0.077	0.000	-0.020	0.679	0.111	0.000		

주: 70세 이상 가구원 있음 변수는 가구주를 제외하고 70세 이상 가구원이 있다는 의미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상을 뒷받침하였다.

다음으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소득 구간으로 나누어 저소득보다 고소득 가구에서 대체서비스 지출 비중이 더 큰지 확인해 보았다. 중위 소득 기준 50% 미만 저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 기준 50% 미만 가구에 비해 중위 소득 50~80% 미만 가구가 약 3%p 정도 대체서비스 지출 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위 80~120% 미만 가구는 중위 50% 미만 가구에 비해 약 3.8%p 정도 지출 뭉이 높았으며, 중위 소득 120~150% 미만 가구는 5.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더 높은 가구는 5.1%p 높아서 중위 소득 기준 120% 이상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대체서비스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나머지 변수의 효과는 <표 2-8>과 대동소이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 변수로 활용되는 변수는 늘 측정오차 가능성을 안고 있다. 문헌을 따라 총지출을 설명변수로 하고, 이 지출 변수의 측정오차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도수변수로 가처분소득을 활용해 다시 추정해 보았다.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대체서비스 지출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계수의 절대값은 더 커 도구변수 추정결과가 좀 더 큰 효과를 주었다. 이 외에도, 이렇게 측정오차 문제를 교정할 경우 가구주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체서비스 지출 뭉이 증가하던 현상도 사라지는 차이가 나타났다. 6세 미만 가구원이 있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대체서비스 지출 뭉을 0.9%p 높이며, 고령가구일 때 기혼 외벌이 가구에 비해 대체서비스 지출 뭉이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0.8%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표 3-8>에서 소득변수로 총지출을 사용했을 때와의 차이점이다.

<표 3-10>에서는 시간에 따라 추정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았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25~59세 가구주로 도시거주 2인 이상 가구에 한정해 분석하였다. 2003년 이전에는 도시거주 2인 이상 가구만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표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이와 같이 한정하였다. 1990년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시장소득 1% 증가의 효과

〈표 3-9〉 2014년 기준 다양한 소득 기준 구간별 및 도구변수 분석 결과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총지출 도구변수 추정 (도구=가처분소득)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소득분위 (중위 50% 미만 기준)						
중위 50~80% 미만	0.030	0.000	0.025	0.000	0.059	0.000
중위 80~120% 미만	0.038	0.000	0.040	0.000		
중위 120~150% 미만	0.055	0.000	0.052	0.000		
중위 150% 이상	0.051	0.000	0.050	0.000		
가구주 교육						
고졸	0.009	0.001	0.008	0.005	-0.003	0.360
전문대졸	0.012	0.002	0.010	0.007	-0.002	0.703
대학 이상	0.014	0.000	0.012	0.000	-0.003	0.455
가구주 연령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6세 미만 가구원 있음	0.003	0.328	0.003	0.422	0.009	0.011
6~13세 미만 가구원 있음	-0.021	0.000	-0.021	0.000	-0.020	0.000
13~20세 미만 가구원 있음	-0.023	0.000	-0.022	0.000	-0.027	0.000
70세 이상 가구원 있음	-0.001	0.889	-0.002	0.639	0.003	0.361
가구형태(기혼 외벌이 기준)						
맞벌이	0.007	0.001	0.008	0.000	0.010	0.000
배우자 없는 2인 이상 가구	0.017	0.000	0.017	0.000	0.025	0.000
고령가구	0.006	0.223	0.004	0.393	0.008	0.095
모자가구	-0.025	0.000	-0.025	0.000	-0.022	0.000
단독가구	-0.002	0.684	0.000	0.950	0.006	0.308
ln(가구원수)	-0.011	0.016	-0.009	0.044	-0.039	0.000
상수항	0.196	0.000	0.200	0.000	-0.603	0.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절대값은 감소하는 변화가 관찰되었다.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몫이 증가하는 현상은 1990년과 1995년에는 뚜렷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수의 방향, 유의수준을 볼 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6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경우 과거에는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음(-)의 영향을 주었지만, 2005년경부터는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크기는 2010년에 매우 뚜렷하게 커진다. 2014년에는 절대값은 축소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적어도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6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일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

는 경향이 강했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반대로 대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가구의 소비지출로는 그 영향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게 되었다. 2010년에는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비중이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3.2%p나 높았는

〈표 3-10〉 25~59세 가구주 기준 도시거주 2인 이상 가구 시기별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1990년		1995년		2000년	
로그(시장소득)	0.037	0.000	0.032	0.000	0.021	0.000
가구주 교육						
고졸	0.005	0.003	0.002	0.316	-0.005	0.025
전문대졸	0.006	0.145	0.007	0.087	-0.006	0.143
대학 이상	0.017	0.000	0.018	0.000	-0.002	0.445
가구주 연령	0.000	0.534	-0.001	0.000	-0.001	0.000
6세 미만 가구원 있음	-0.001	0.519	-0.013	0.000	-0.008	0.001
6~13세 미만 가구원 있음	-0.016	0.000	-0.028	0.000	-0.018	0.000
13~20세 미만 가구원 있음	-0.015	0.000	-0.030	0.000	-0.024	0.000
가구형태(일반가구 기준)						
맞벌이	0.005	0.010	0.016	0.000	0.016	0.000
모자가구	-0.003	0.620	-0.018	0.008	-0.026	0.000
로그(가구원수)	-0.027	0.000	-0.017	0.000	-0.022	0.000
상수항	-0.197	0.000	-0.105	0.000	0.036	0.026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2005년		2010년		2014년	
로그(시장소득)	0.018	0.000	0.012	0.000	0.016	0.000
가구주 교육						
고졸	-0.004	0.058	-0.001	0.777	-0.012	0.006
전문대졸	-0.004	0.279	-0.001	0.887	-0.008	0.120
대학 이상	-0.011	0.000	-0.006	0.077	-0.009	0.055
가구주 연령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6세 미만 가구원 있음	0.014	0.000	0.032	0.000	0.008	0.013
6~13세 미만 가구원 있음	-0.015	0.000	-0.021	0.000	-0.018	0.000
13~20세 미만 가구원 있음	-0.018	0.000	-0.024	0.000	-0.018	0.000
가구형태(일반가구 기준)						
맞벌이	0.016	0.000	0.014	0.000	0.011	0.000
모자가구	-0.017	0.000	-0.021	0.000	-0.028	0.000
로그(가구원수)	-0.009	0.015	-0.004	0.330	-0.026	0.000
상수항	0.057	0.000	0.137	0.000	0.097	0.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데, 2014년에는 겨우 0.8%p 높게 되었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이 외에도 시대가 바뀌어도 대체로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가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몫 증가에서 소득 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추정치를 이용해 식 (3-3)의 소득 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1보다 큰 값을 얻게 되어 가구생산 대체서비스 지출이 사치재 특성을 가지고 있음과 연결된다.¹⁶⁾

또한, 저소득 가구보다 고소득 가구에서 더 큰 지출 몫을 보여 불평등 심화가 저소득 가구의 증가로 연결된다면 대체서비스 시장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불평등 심화가 고소득 가구의 증가로 연결된다면 대체서비스 시장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즉 어떤 불평등이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맞벌이 가구 증대, 1인 가구 증대, 배우자 없는 2인 이상 가구의 증대는 대체서비스 증가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배우자 없는 2인 이상 가구는 증가세가 없지만,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체서비스 지출 몫 증가 현상은 인구학적 변동이나 소득수준의 향상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식 (3-5)의 분해를 적용한 결과를 <표 3-11>에 보고하였다. 가급적 많은 변수를 동원할 수 있는 2000년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분해 방법을 적용했는데, 2000년 대체서비스 비중 17.7%에서 2014년 19.6%로 증가의 37.9%를 소득 수준 향상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는 2000년 기준 계수값을 이용했을 때의 결과이며 2014년 계수값을 이용할 경우 약 30% 수준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교육수준이나 연령은 오히려 대체서비스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서비스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고령화로 인해 연령이 높은 가구주 비중이 상승했고, 최근으로 올수록 학력과 대체서비스 관계가 모호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가구원 연령 구성 변화는 미약한 수준이긴 하지만 대체서비스 증가 요

16) 이를테면,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의 소득 탄력성= $1+0.012/0.196>1$ 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추정된 모든 소득, 총지출 추정치는 탄력성이 1보다 커서 사치재 성격이 강함을 보여준다.

〈표 3-11〉 25~59세 가구주 기준 도시거주 2인 이상 가구 분해분석 결과

	2000년 기준		2014년 기준	
	계수	비율	계수	비율
소득	0.0069	(37.9%)	0.0054	(29.9%)
가구주 교육 수준	-0.0001	(-0.6%)	-0.0006	(-3.4%)
가구주 연령	-0.0022	(-11.8%)	-0.0018	(-10.1%)
가구원 연령 구성	0.0008	(4.6%)	0.0000	(0.2%)
가구 형태 변화	0.0044	(24.4%)	0.0041	(22.5%)
2014년과 2000년 차이	0.0182	(100.0%)	0.0182	(1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인으로 작용했다. 가구 형태 변화는 2000년 회귀계수를 이용할 경우 전체 지출 몫 증가의 24.4%, 2014년 회귀계수를 이용할 경우 전체 지출 몫 증가의 22.5%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결과는 소득의 증가와 가구형태 변화가 절반 이상을 설명함을 보여준다. 2000년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분해할 경우 지출 몫 증가의 약 62%가량을, 2014년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분해할 경우 약 52% 정도를 설명하였다.

제4절 소 결

지금까지 가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몫 증가의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소득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득 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1보다 큰 값이 도출되어, 가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이 사치재 특성을 가지고 있음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소득 향상 또는 고소득 중심의 불평등 심화는 둘 다 가구생산대체서비스 증가를 야기할 것이다. 이는 소득 구간별 분석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반면에 소득불평등이 저소득 가구의 증가로 귀결된다면 대체서비스 지출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즉, 어떤 불평등이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맞벌이 가구 증대, 1인 가구 증대, 배우자 없는 2인 이상 가구의 증대

는 대체서비스 증가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배우자 없는 2인 이상 가구는 증가세가 없지만,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6세 미만 자녀 유무는 2000년대 중후반에는 대체서비스 비중 증가의 방향으로 작용했지만, 무상보육 확대로 최근에는 그 힘이 약화되었다. 반면, 고령 가구원의 존재는 고령자 관련 서비스 증대로 대체서비스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최근 들어 엇보인다. 특히 추정오차를 통제한 모형에서 그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분해를 해보면, 소득 증가와 맞벌이화 같은 가구 형태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은 소비패턴 변화, 특히 저임금 고용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의 증가에서 예상대로 양극화로 인한 고소득층 증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맞벌이화 같은 인구학적 변화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장의 분석은 이를 가구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다음 장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시장에서 여성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고소득층 성장이 활발하다면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는 가구의 인구학적 변화와 (양극화로 인한) 고소득층 증가가 가구의 소비행태를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그럼 그렇게 변화된 소비행태가 저임금 근로자 고용을 늘리는지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2장의 분석에 따르면 수준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맞벌이나 외벌이 가구, 저소득 가구나 고소득 가구 모두에서 이 분야 지출이 증가한 것을 보면 선호(preference)의 변화도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3장의 분석은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장기 소비지출을 연구할 때 각 소비항목별 상대가격의 변화가 지출 구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에 대한 검토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도 있다.

〈부표〉 Mazzolari & Ragusa(2013)의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항목과
가계동향조사 매치표

2004 Consumer Expenditure Diary Survey		2014 가계동향조사
Category	Universal Classification Code(UCC)	
Food away from Home	190112, 190212, 190312, 190322 Lunch, Dinner, Snacks and Breakfast at Full Service.	식사비(계) -주점, 커피숍 포함
Drinks away from Home	200512, 200522, 200532 Beer, Wine and other Alcoholic beverages at Full Service.	주점, 커피숍
Repair & Maintenance Services	230000 Repair, maintenance, and improvements for built in dishwasher, garbage disposal, and range hood 230110 Maintenance of property, including items such as ceiling repair, black top, brick, or masonry work, air conditioner repair, roof and awning repair, house painting, papering, chimney cleaning, electrical inspection, furnace inspection and repair, wiring, pest control, carpenter, plumber, etc. 270210 Water and sewerage maintenance 270410 Garbage, trash collection 270900 Septic tank cleaning 340610 Repair of television, radio, and sound equipment, excluding installed in vehicles 340620 Repair of household appliances; including stove, vacuum, washer, dryer, sewing machine, refrigerator, and calculator; excluding garbage disposal, range hood, and built-in dishwasher 340630 Furniture repair, refurbishing, or reupholstery 340903 Miscellaneous home services and small repair jobs not already specified 340913 Repair and alterations of miscellaneous household equipment, furnishings, and textiles 440110 Shoe repair and other shoe services 440130 Alteration, repair, tailoring of apparel and accessories 440150 Watch and jewelry repair	주택설비 수리서비스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실내장식관련 서비스 가정용기기 및 가전서비스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 영상 음향 및 정보기기 수리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캠핑 및 운동용품 서비스 화훼 및 애완동물 서비스

〈부표〉의 계속

2004 Consumer Expenditure Diary Survey		2014 가계동향조사
Category	Universal Classification Code(UCC)	
Delivery Services	340120 Delivery services	화물운송 및 보관
Babysitting Services	340210 Babysitting or other home care for children	보육료 기타사회복지
Housekeeping Services	340310 Housekeeping service, such as housekeeping, cooking, maid service, and carpet and upholstery cleaning services 340410 Gardening and lawn care services, such as mowing, tree services, fertilizing, and yard work 340510 Moving, storage, and freight express 340520 Household laundry and dry cleaning, not coin operated 440210 Apparel laundry and dry cleaning, not coin operated	의복관련서비스(계) 신발관련 서비스 가정용 섬유관련 서비스 가사서비스(계)
Personal Care Services	650110 Personal care services for females, including haircuts 650210 Personal care services for males, including haircuts	이미용료 기타이미용서비스 개인용품서비스

자료 : Mazzolari & Ragusa(2013)의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제 4 장

소비변화와 고용변화 : 가사생산대체서비스를 중심으로

제1절 머리말

지금까지 2장과 3장을 통해 우리나라 소비패턴 변화를 분석했다. 재화 소비는 줄고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사생산 대체서비스로 범주화할 수 있는 지출 항목들의 총지출 중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가사생산대체서비스의 지출 비중은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더 높은 가운데, 맞벌이 가구, 배우자 없는 2인 이상 가구, 단독 가구 등에서 대체서비스 지출 비중이 높은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2000년대 이전에는 6세 미만 자녀가 주로 집에서 가사노동의 형태로 키워졌다면, 적어도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가사노동이 서비스 조달로 대체되는 패턴이 지출 비중 변화, 회귀분석에서 모두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비록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2012년 이후에는 지출이 대폭 감소했지만, 이 지출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화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3장의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성장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로 인한 맞벌이 가구의 비중 증대, 만혼화 등으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같은 인구학적 변동이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사생산대체서비스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는 사치재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자료상에서 나타난 지출

비중 증가를 분해분석해 본 결과 인구학적 변동보다 더 큰 영향을 소득 변화가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지출 성장이 고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려고 한다. 고숙련,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빨리 증가할수록 시간의 기회비용이 커져 더 많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이 서비스 일자리에서 일하는 저숙련 근로자 노동수요도 커질 것이다. 바로 양극화(job polarization) 가설이 말하는 저숙련 근로자 노동수요 증가가 바로 이 현상과 관련이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서비스 일자리는 저숙련 일자리이지만, 원격지에서 조달할 수 없고, 기계로 대체하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종종 해외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곤 하는 생산직 일자리와는 달리 자신이 사는 지역 노동시장에서 반드시 조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고숙련, 고임금 근로자들이 밀집하거나 불평등 수준이 높은 지역의 노동시장에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도 많은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양극화로 인해 불평등이 강화된 결과 저숙련 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종의 「고숙련 일자리 증대의 저숙련 노동수요로의 파급효과」는 Manning(2004)에서 이론적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고, Mazzolari & Ragusa(2013), Autor & Dorn(2013)에 의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유사한 논리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강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선 줄어든 가사시간을 벌충하기 위해 가사노동의 외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사는 곳 근처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도 활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역자료를 이용해 실제 이런 경향이 있는지 검증한 것이 Mazzolari & Ragusa(2013), Autor & Dorn(2013)의 접근법이였다. 여기서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해 관련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2절에서 표준산업분류를 이용해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을 정의하고 관련 고용이 실제 저임금 고용 성격이 강한지 분석해 볼 것이다. 기초통계 제시 후 3절에서는 Mazzolari & Ragusa(2013)의 실증분석 방

법론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임금자의 소득증가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노동수요 증가로 인한 고용 증대라면 대체서비스 산업분야 근로자의 임금이 고임금자의 소득증가가 큰 곳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4절에서는 이 장의 분석을 결론짓고 함의를 도출하겠다.

제2절 기초통계

Mazzolari & Ragusa(2013)에 따르면 미국에선 임금을 서열별로 10개 분위로 나눌 때 하위 1분위의 25% 근로자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에 종사(2005년 기준)하며, 중위 임금 집단은 단지 5%만 관련 일자리에 종사하는 등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는 저임금 특성이 매우 강하다고 한다. 이처럼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에 일하는 근로자는 임금이 높을수록 적은 반면,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는 고임금 근로자 가구일수록 많아진다고 한다. 즉, 가사생산대체서비스의 수요자는 보다 고임금, 고숙련 근로자, 가사생산대체서비스의 생산자는 보다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인 셈이다.

3장의 분석에 따르면 수요자가 고소득 가구인 것은 분명하다. 이하에서는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의 특성을 통계청 지역고용조사를 이용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는 <표 4-1>처럼 Mazzolari & Ragusa(2013)의 연구를 따라 그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 소분류로 정의했다.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같은 외식 관련 산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처럼 보육, 주간 노인돌봄시설, 각종 수리업과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표준산업분류 세 자리 이상이어야 보다 엄밀히 정의되지만,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세 자리밖에 이용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평균임금을 조사하기 때문에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산업 일자리의 질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에서 2014년 기준으로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산업 일자리 분포를 임금분위별로 보면, 전체 일자리 중 이 산업 일자리는 12.8%인데, 가장 임금이 낮은 1분위 일자리 중 무려 35.9%가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 성격

<표 4-1> 가사생산서비스 부문 정의

Mazzolari & Ragusa, 미국 산업	우리나라(표준산업분류 소분류)
Eating and Drinking Places 641	음식점업
Business and Repair Services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Services to buildings 72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Automotive Parking and	(보육, 주간 노인요양시설 포함)
Carwashes 75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Automotive &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Other Repair Service 751~760	기타 개인 서비스업
Personal Services 761, 771~79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Child Care Services 862~863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자료 : Mazzolari & Ragusa(2013).

<표 4-2> 임금분위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종사 임금근로자 비중 (2014년 기준)

	비가사대체서비스업 임금근로자 비중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 임금근로자 비중	합
최하위 1분위	64.1%	35.9%	100.0%
2	78.8%	21.2%	100.0%
3	83.6%	16.4%	100.0%
4	84.8%	15.2%	100.0%
5	90.6%	9.4%	100.0%
6	94.7%	5.3%	100.0%
7	95.7%	4.3%	100.0%
8	96.8%	3.2%	100.0%
9	98.4%	1.6%	100.0%
최상위 10분위	99.3%	0.7%	100.0%
전체	87.2%	12.8%	100.0%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이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체서비스업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아져 상위 10분위에는 겨우 0.7%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특성이 강하긴 하지만, 이 부문 일자리는 지역별 고용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부 산업별로 보면, 2014년 기준 음식점업에 102만 5,000명이 고용되어 있어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증가세가 가장 큰 산업은 보육시설, 노인돌봄 관련 시설들이 있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46만 3,000명 증가)이었다. 가구 내 고용활동,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이 증가하였다.

〈표 4-3〉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임금근로자 추이

	임금근로자 수(천 명)	임금근로자 중 비중(%)
2008년	1,624	10.3
2010년	1,812	10.8
2012년	2,177	12.2
2014년	2,427	12.8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표 4-4〉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세부 산업별 임금근로자 수

(단위: 천 명)

세부 산업	2008년	2014년	증감
음식점업	851	1,025	175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116	204	88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99	662	463
자동차 및 모터 사이클 수리업	109	106	-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24	25	2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105	139	34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4	173	59
가구 내 고용활동	106	92	-14
전 체	1,624	2,427	80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직업별로 보면, 서비스 종사자 고용 규모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근로자 규모도 2014년 111만 1,000명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음식서비스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이들 세 직업군은 증가폭도 크게 나타났다. 전문가는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들이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가사 및 육아도우미와 음식 관련 단순 종사원이 대부분으로, 두 직업군 모두 고용이 증가하였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 이하 학력자가 다수이긴 하지만,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세분해 보면, 전문대졸, 대졸 이상 학력층은 전문가와 서비스 종사자에서 증가하는 반면, 고졸 이하 학력층은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세부 직업별 임금근로자 수

(단위: 천 명)

직업 구분	2008년	2014년
관리자	10	17
전문가	129	338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103	288
사무종사자	50	67
서비스 종사자	792	1,11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85	121
주방장 및 조리사	283	335
음식서비스 종사자	374	481
판매 종사자	43	98
농어업숙련/기능원/조립원	151	168
단순노무 종사자	450	630
가사 및 육아 도우미	137	164
음식 관련 단순 종사원	236	308
전 체	1,624	2,427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표에는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고졸 이하 서비스 종사자는 주방장 및 조리사와 음식 서비스 종사자가 주축이며, 단순노무 종사자는 가사 및 육아도우미와 음식 관련 단순 종사원이다.

전문대졸 이상 전문가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주축인데, 이 안에는 보육 교사가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 종사자는 대부분 주방장 및 조리사, 음식 서비스 종사자인데,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선 남성 주방장 및 조리사가 2014년 현재 4만 2,000명으로 여성 주방장 및 조리사 2만 8,000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남녀 각 1만 9,000명, 1만 1,000명이었으므로, 성별에 관계없이 2배가량 증가했다. 여성 고학력 서비스업 종사자는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와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도 2014년 현재 각 1만 5,000명, 4만 명 있으며, 이는 2008년 각 2,000명, 2만 4,000명에서 증가한 것이다. 고졸 이하 학력층 주방장 및 조리사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남성은 2014년 7만 3,000명이지만, 여성은 19만 3,000명이다. 대신, 2008년에는 남성 4만 7,000명, 여성 20만 6,000명으로, 남성은 증가했지만 여성은 감소하는 차이가 있었다. 고졸 이하 학력 음식서비스 종사자도 남성은 2008년 5만 5,000명에서 2014년 12만 2,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여성은 각 27만 7,000명, 29만 5,000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관련 서비스 직업군에 고학력자 진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이 분야 고용의 주축이었던 고졸 이하 여성은 규모 증가가 주춤하거나 감소하고, 남성의 진입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표 4-6〉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교육수준별 임금근로자 수

(단위: 천 명)

	2008년	2014년	증감
초졸 이하	221	267	46
중졸 이하	272	330	58
고졸	824	1,176	351
전문대졸	167	327	160
대졸	128	302	173
대학원 이상	11	26	15
전체	1,624	2,427	80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보이는 특징이 나타나는 셈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5만 2,000명 증가했으며, 여성은 55만 1,000명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2008년에는 남성 25.4%와 비교해 2014년 남성 27.4%로 이 부문 임금근로자 중 남성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5~24세의 고용증가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26만 명 증가해 2008년에는 16만 2,000명에 불과했던 고용 규모가 42만 2,000명으로 증가했다. 50대와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도 각각 20만 6,000명, 21만 4,000명 증가했다. 이를 보면 다른 부문보다 가사생산대체 서비스 부문은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와 은퇴연령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2008년에만 해도 40대>50대>30대 순으로 근로자가 많았

〈표 4-7〉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교육수준별, 직업별 임금근로자 수

(단위: 천 명)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2008년	2014년	2008년	2014년	2008년	2014년
관리자	3	4	2	3	4	10
전문가	28	56	48	133	53	149
사무 종사자	25	29	10	13	15	25
서비스 종사자	687	908	66	116	39	87
판매 종사자	33	73	4	12	6	13
기능원	81	84	24	25	10	12
조립원	30	35	3	5	4	7
단순노무 종사자	430	584	10	21	9	25
전체	1,318	1,773	167	327	139	327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표 4-8〉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성별 임금근로자 수

(단위: 천 명)

	2008년		2014년		증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성	413	(25.4)	666	(27.4)	252
여성	1,211	(74.6)	1,761	(72.6)	551
전체	1,624	(100.0)	2,427	(100.0)	80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표 4-9〉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연령구간별 임금근로자 수

(단위: 천 명)

	2008년	2014년	증감
15~24세	162	422	260
25~29세	181	206	26
30~39세	341	390	48
40~49세	473	523	50
50~59세	345	551	206
60세 이상	123	336	214
전체	1,624	2,427	80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지만, 2014년에는 50대>40대>15~24세 순으로 연령 구성이 변화하였다.

표에는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50세 이상 고령자는 주로 복지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증가하며, 15~24세는 주로 서비스 종사자에서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음식서비스 종사자에서 많이 증가했다. 25~49세는 주로 사회복지 전문가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남자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에서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임금수준별로 보면, 비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에서는 저임금 근로자가 2008년 312만 5,000명에서 2014년 299만 1,000명으로 규모가 축소된 반면,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은 93만 명에서 122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08년에는 저임금 근로자 중 22.9%가 이 부문 근로자였지만, 2014년에는 29.1%로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중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근로자 비중이 2008년 10.4%, 2014년 12.8%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임금 근로자 중 이 부문 근로자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이다. 그래도 대체서비스 부문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08년에는 56.6%였으나, 2014년에는 50.0%로 다소 감소했다.

다른 부문에서는 중간임금근로자가 2008년 682만 4,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48.3%를 차지했지만, 2014년에는 881만 1,000명, 53.3%로 증가했다.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에서도 62만 2,000명이 110만 4,000명으로 증가했고, 비중도 37.9%에서 44.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가사생산대체서비스가 저임금 성격이 매우 강하며, 고학력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학력자 비중

〈표 4-10〉 임금수준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여부별 임금근로자 분포

(단위: 천 명, %)

		비가사생산대체서비스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전체	
2008년	저임금	3,125	(22.1)	930	(56.6)	4,055	(25.7)
		(77.1)		(22.9)		(100.0)	
	중간 임금	6,824	(48.3)	622	(37.9)	7,447	(47.2)
		(91.6)		(8.4)		(100.0)	
	고임금	4,001	(28.3)	60	(3.7)	4,061	(25.8)
		(98.5)		(1.5)		(100.0)	
전체	14,119	(100.0)	1,644	(100.0)	15,763	(100.0)	
		(89.6)		(10.4)		(100.0)	
2014년	저임금	2,991	(18.1)	1,227	(50.0)	4,218	(22.2)
		(70.9)		(29.1)		(100.0)	
	중간 임금	8,811	(53.3)	1,104	(44.9)	9,915	(52.2)
		(88.9)		(11.1)		(100.0)	
	고임금	4,577	(27.7)	85	(3.5)	4,662	(24.5)
		(98.2)		(1.8)		(100.0)	
전체	16,538	(100.0)	2,457	(100.0)	18,995	(100.0)	
		(87.1)		(12.9)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이 높고, 직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들 서비스의 수요층은 고소득층인데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층은 저숙련, 저임금 계층이라는 의미이다. 다음 절에서는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 증가가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강화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 보겠다.

제3절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증가의 원인 분석

1. 양극화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고용증가에 미친 영향

저숙련 일자리와 고숙련 일자리는 늘고 중간숙련 일자리는 줄어드는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 현상은 컴퓨터 등 기술에 의한 노동의 대체, 해외 아웃소싱 같은 국제화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합의이다. 그렇지만, 기술변화, 국제화는 중간숙련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숙련 일자리가 증가하는 현상은 설명할 수 있지만, 저숙련 일자리가 왜 증가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주지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 양극화로 인한 고숙련자 임금증가→고숙련 가구에서 시간의 기회비용 증가로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가설이다. 이 서비스 부문은 앞서 본 것처럼 대부분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이기 때문에 왜 기술변화와 국제화로 만들어진 고숙련자 일자리 기회가 저임금 일자리도 늘리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 절에서는 바로 이 가설이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선진산업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도 활발해지는 과정에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강화는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던 노동을 외부화하는 계기가 된다. 경제활동을 위해 자녀 보육이나 음식 조리 등 이전에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을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집안에서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는 고령화가 발생하면, 고령자 돌봄 수요도 가정 내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화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고소득자 소득 증대, 인구학적 변동이 우리나라 가게 내에서 지출패턴 변화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2장과 3장에서 분석했으므로, 이 절에서는 보고서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한 관련 서비스 고용변동과의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양극화 가설과 연관지으면, 특히 고숙련자 노동수요가 높은 곳에서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도 많이 늘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기계나 원격지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육아를 기계에 의존할 수는 없으며, 외식을 하려고 해도 집에서 너무 멀면 안 되고, 가사 도우미를 쓰려고 해도 가사 도우미가 너무 먼 곳에 살면 안 된다. 즉, 이 서비스는 기계로 대체하기엔 반복적이지 않은 노동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격지로 대체하기엔 근거리 국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가설의 검증은 고속런자 노동수요가 높아 고속런자 임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서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Mazzolari & Ragusa (2013)의 방식과 유사하게 검증해 보겠다. 어떤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고임금자의 임금이 빠르게 증가한다면, 해당 지역의 최상위 10분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몫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Mazzolari & Ragusa (2013)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핵심 설명변수로 지역 내 최상위 10분위 임금근로자의 임금 몫 변화를, 종속변수로 가사생산대체서비스의 고용변화를 설정해 회귀분석하였다. 식 (4-1)이 이를 표현하고 있는데, β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면 최상위 10분위 임금 몫의 증가는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이므로 이 가설을 검증한 것이 된다(Mazzolari & Ragusa(2013), p.81 식 1 참조).

$$\begin{aligned} \Delta \log(\text{Employment})^{HPsub's}_{ct} = & \alpha + \beta \Delta WB^{90}share_{ct} \\ & + \gamma_t + \epsilon_{ct}, \end{aligned} \quad (4-1)$$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도 동 시기에 함께 활성화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그 효과를 분리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하기 위해 추정식에는 해당 지역 기혼여성의 고용률 변화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이 외에도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 돌봄의 외부화로 인해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 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통제하였다. 이 외에도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실업률 변화나 청년층 인구 비중 변화도 함께 통제하였다.

이와 같이 추정을 할 때 지역 고유의 특성 고려도 중요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한 자료에 지역 특성변수가 많지 않으므로 지역 고정효과(fixed effect)를 통제해 최소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실제 추정에서는 지역별 자료를 사용하므로, 같은 지역이 여러 번 등장하는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수준에서 로버스트(robust)한 표준오차를 사용해 가설 검증하였다.

지역 수준에서 집계된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지역자료를 이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너무 광역 단위 자료를 이용하면 자유도가 부족해 추정의 기각력(power)이 약해지고, 너무 소지역자료를 이용하면 각 지역 노동시장의 독립성이 부족해 각 지역의 독립성을 전제하는 본 분석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분석은 해당 지역에서 고속연자 노동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 해당 지역의 저숙련 일자리도 빠르게 증가한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서울을 예로 들면 강남구의 고속연자 노동수요 증가가 강남구가 아닌 과천의 저숙련자 노동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권 분석에 따르면, 과천 노동시장은 서울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만약 서울과 과천을 다른 지역으로 간주하고 분석 모형을 설계하면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현상이 마치 관계가 없는 것처럼 추정될 수 있다. 이 가설적 상황에서 고속연자는 서울에서, 저숙련자는 과천에서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모형의 추정에서는 광역시 및 시군 단위를 독립된 지역으로 간주하는 통상적인 분석과 노동시장권 설정 이론에 따른 노동시장권역 구분에 근거한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였다. 노동시장권 설정은 본 연구에서 독립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상호 외(2012)를 따르겠다.¹⁷⁾ 다만,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구획된 노동시장권 정보를 통계청 지역고용조사에 결합시켜야 하므로 노동시장권 구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었다. 이를테면, 서울 같은 특별시, 광역 시도 노동시장권 분석에서는 독립된 노동시장권으로 구획될 수 있는데, 지역고용조사에서는 구단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노동시장권역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이 외에도, 최근 자료에서는 창원+진해+마산이 통합되어 하나의 노동시장권으로 간주해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차이이다. 이 외에는 시, 군 단위 행정구역끼리 하나의 노동시장권으로 묶이기 때문에 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17) 분석결과를 활용하도록 허락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이상호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자세한 방법론과 권역설정 방법은 이상호 외(2012)에 설명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 권역 설정기준을 따른 데에서 오는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 기준을 따르기로 결정한 본 보고서의 저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분석을 위해 고용 증감자료를 만들어야 하므로, 2008~10년 증분, 2010~12년 증분, 2012~14년 증분을 계산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광역시·도 단위보다 더 세부적인 지역자료를 이용할 경우 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만 지역고용조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앞의 분석은 산업소분류 자료로 했지만, 여기서의 분석은 산업중분류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분석에 사용된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산업은 음식점업 및 주점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분류로 분석할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 포함되며, 수리업에서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이 포함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두 업종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에 포함된다고 보기엔 거리가 멀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규모가 크므로 포함 여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았다.

지역 집계자료를 이용하므로 분석에는 지역 임금근로자 수(분석대상 자료 평균)를 가중치로 사용했다. 분석에서 설명변수에 이용한 최상위 임금 몫 변수는 지역별로 임금분포를 10개로 나눌 때 최상위 1분위의 임금 몫이다. 즉, 지역별 상위 10%의 임금 몫의 시간에 따른 증감이 종속 변수가 된다.

먼저,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된 지역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최상위 임금 몫 증감 변수의 계수가 양(+)의 값을 가져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몫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 고용도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혼여성 고용률 증감 변수도 양(+)의 계수를 가져 기혼여성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 고용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 고정효과 통제 여부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통제 여부와 무관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반대로 음(-)의 계수를 가졌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 고용 감소가 크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장의 분석에서 고령가구는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비중이 그렇지

〈표 4-11〉 행정구역 단위 구분 지역자료 추정결과

		복지시설 제외			복지시설 포함		
		계수	표준오차	p값	계수	표준오차	p값
지역 고정 효과 과 미통 제	최상위 임금 몫 증감	0.339	0.309	0.275	0.166	0.302	0.583
	연도1	-0.061	0.032	0.061	0.035	0.028	0.208
	연도2	0.036	0.027	0.182	0.031	0.018	0.088
	기혼여성 고용률 증감	1.711	0.358	0.000	1.682	0.344	0.000
	실업률 증감	-0.028	1.695	0.987	-0.084	1.352	0.951
	65세 인구 비중 증감	-6.322	3.253	0.054	-4.524	3.292	0.171
	15~24세 비중 증감	3.107	2.352	0.188	4.589	2.408	0.058
	대출 이상 비중 증감	-0.576	0.552	0.298	-0.276	0.594	0.643
	상수항	0.077	0.040	0.058	0.103	0.039	0.009
R^2		0.198			0.190		
지역 고정 효과 과 통제	최상위 임금 몫 증감	0.421	0.434	0.334	0.242	0.364	0.507
	연도1	-0.056	0.042	0.185	0.040	0.036	0.264
	연도2	0.025	0.038	0.523	0.027	0.026	0.305
	기혼여성 고용률 증감	1.760	0.511	0.001	1.619	0.487	0.001
	실업률 증감	-0.540	2.199	0.806	-0.265	1.825	0.885
	65세 인구 비중 증감	-3.213	7.919	0.686	-1.390	7.173	0.847
	15~24세 비중 증감	-0.466	3.731	0.901	-0.966	2.958	0.744
	대출 이상 비중 증감	-0.363	0.823	0.660	0.082	0.876	0.925
	R^2		0.339			0.431	

주: 최상위 임금 몫은 임금 서열별로 10개로 구분한 뒤 최상위 10분위, 즉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임금 몫을 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않은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지만, 고령자가 가구원으로 있는 경우엔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소비 지출이 최근에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의 결과는 후자보다는 전자 가능성이 더 일반적임을 시사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소득자 거주지역과 저소득자 거주지역이 행정구역상은 다르지만 현실에서는 하나의 노동시장권역에 속한다면, 고소득자의 빠른 소득증가가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 일자리를 증가시키더라도 이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므로 마치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통제하려면 기존의 지역 구분을 노동시장 권역 개념에 맞추어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4-12>에서는 이와 같이 지역을 동일 노동시장권역에 따라 재편성한 뒤 추정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결과를 보면, 최상위 임금 몫 증감은 더 뚜렷하게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 고용을 증가시키며,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하면 10% 수준을 다소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그런데,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하면 모든 설명변수의 표준오차가 커져 정확성이 떨어지는 기각력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추측된다. 겨우 세 개 기간의 자료에서 고정효과를 통제했기 때문에 기각력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서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을

<표 4-12> 노동시장권으로 구분한 지역자료 추정결과

		복지시설 제외			복지시설 포함		
		계수	표준오차	p값	계수	표준오차	p값
지역 고정효과	최상위 임금 몫 증감	0.831	0.369	0.026	0.804	0.328	0.016
	연도1	-0.046	0.040	0.257	0.050	0.034	0.143
	연도2	0.028	0.039	0.480	0.012	0.021	0.572
	기혼여성 고용률 증감	1.765	0.523	0.001	1.211	0.416	0.004
	실업률 증감	-0.685	1.928	0.723	-1.123	1.463	0.444
	65세 인구 비중 증감	-4.411	2.085	0.036	-1.587	2.040	0.438
	15~24세 비중 증감	1.949	2.142	0.365	2.675	1.583	0.094
	대출 이상 비중 증감	-0.571	0.727	0.434	-0.113	0.763	0.882
	상수항	0.071	0.029	0.016	0.097	0.027	0.000
R^2		0.1738			0.1469		
통제	최상위 임금 몫 증감	0.751	0.534	0.162	0.661	0.438	0.133
	연도1	-0.044	0.049	0.373	0.048	0.041	0.241
	연도2	0.002	0.064	0.981	-0.005	0.039	0.891
	기혼여성 고용률 증감	1.967	0.750	0.010	1.320	0.582	0.025
	실업률 증감	-1.816	3.050	0.553	-2.569	2.228	0.251
	65세 인구 비중 증감	0.073	7.233	0.992	-0.457	5.264	0.931
	15~24세 비중 증감	1.830	4.049	0.652	1.645	2.437	0.501
	대출 이상 비중 증감	-0.970	1.061	0.362	-0.261	0.989	0.793
	R^2		0.3138			0.3808	

주: 최상위 임금 몫은 임금 서열별로 10개로 구분한 뒤 최상위 1분위, 즉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임금 몫을 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혼여성의 고용률 증가도 지역 고정효과 통제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행정단위에 속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노동시장으로 기능하는 지역을 동일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것이 갖는 장점을 생각해 볼 때 <표 4-11>보다는 <표 4-12>의 결과가 좀 더 믿을 만한 결과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상위 임금계층의 빠른 임금 성장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의 고용증가로 귀결되는, 일종의 과급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2.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증가는 노동수요 주도적 현상인가 : 임금에 대한 분석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 고임금층의 빠른 임금성장이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의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기혼여성의 고용률 증가 또한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 고용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관계를 확인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임금을 분석해 볼 수 있다. 대체서비스업 고용증가가 수요 주도적 현상이라면, 노동공급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가 성립할 경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이 부문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이런 현상이 실제 데이터에서 관찰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도식화하자면, 저임금 일자리 증가가 위의 논리처럼 노동 수요 주도적(demand-driven) 현상이라면, 고소득층·기혼여성 경제활동 가구 소비패턴 변화 → 저임금 일자리 증대 → 저임금 근로자 임금의 빠른 인상이 나타났을 것이므로 실제로도 그랬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중간임금 수준 근로자의 임금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현상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Mazzolari & Ragusa(2013)의 방법을 따라 여기서는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앞 절의 분석은 지역 수준으로 집계된

자료를 이용했지만, 여기서는 지역별 개인자료를 이용해 분석할 것이다.

$$w_{ict} = \alpha + \beta ws_{ct} + \gamma hss_i + \delta(ws_{ct} \times hss_i) + \zeta X_i + e_{ict} \quad (4-2)$$

식 (4-2)에서 w_{ict} 는 각 개인 근로자의 임금, ws_{ct} 는 해당 개인이 사는 지역의 상위 임금층의 임금 몫, hss_i 는 해당 개인이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 종사자인지를 보여주는 더미변수, X 는 나머지 설명변수이다. 여기서 중요한 항목은 $ws_{ct} \times hss_i$ 의 회귀계수인 δ 이다. 어떤 근로자가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 종사자인데, 해당 지역 상위 임금층의 임금 몫이 크면 그 개인의 임금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설명변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되려면 δ 는 양(+)이어야 한다. 특히, 하위 임금을 대상으로 분위회귀를 할수록 δ 가 더 큰 양(+)의 값을 갖는다면 저임금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 종사자일수록 해당 지역 상위 임금층의 임금 몫이 클 때 임금효과가 더 크다는 뜻이 되므로 본 연구의 추론에 더 잘 부합할 것이다.

해당 지역 기혼여성의 고용률 증가도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의 일 자리를 늘릴 수 있다. 이 또한 동일한 모형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아래 추정결과에서는 두 경우 모두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겠다.

설명변수로는 이 외에도 연령, 연령제곱, 교육수준, 성별을 추가로 통제하였다. 2014년 자료만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여기서는 행정권역 자료보다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노동시장권으로 구분한 자료만을 이용해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4-13>을 보면, 중위임금부터 낮은 임금으로 갈수록 분위회귀의 상위층 임금 몫과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종사 여부의 상호작용항의 절대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2분위까지 증가하다가 1분위에서는 절대값이 줄어들었다. 다른 분위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2분위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는 상위층 임금 몫이 커질 때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런데, 좀 더 뚜렷한 효과는 기혼여성 고용비중에서 나타난다. 해당지

역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면 임금 분위가 낮아질수록 더 크게,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13〉 노동시장권으로 구분한 자료를 이용한 임금 분위회귀

		회귀 계수	표준 오차	p값			회귀 계수	표준 오차	p값
중 위 임 금	상위층 임금몫	-0.409	0.049	0.000	기혼여성 고용비증	-0.762	0.023	0.000	
	가사생산대체서 비스 종사여부	-0.288	0.035	0.000	가사생산대체서 비스 종사여부	-0.532	0.039	0.000	
	상호작용항	0.084	0.175	0.633	상호작용항	0.503	0.072	0.000	
4 분 위	상위층 임금몫	-0.310	0.040	0.000	기혼여성 고용비증	-0.739	0.021	0.000	
	가사생산대체서 비스 종사여부	-0.320	0.030	0.000	가사생산대체서 비스 종사여부	-0.567	0.035	0.000	
	상호작용항	0.091	0.161	0.574	상호작용항	0.512	0.065	0.000	
3 분 위	상위층 임금몫	-0.419	0.048	0.000	기혼여성 고용비증	-0.844	0.025	0.000	
	가사생산대체서 비스 종사여부	-0.350	0.044	0.000	가사생산대체서 비스 종사여부	-0.606	0.048	0.000	
	상호작용항	0.199	0.223	0.373	상호작용항	0.571	0.085	0.000	
2 분 위	상위층 임금몫	-0.549	0.067	0.000	기혼여성 고용비증	-0.812	0.028	0.000	
	가사생산대체서 비스 종사여부	-0.430	0.032	0.000	가사생산대체서 비스 종사여부	-0.717	0.052	0.000	
	상호작용항	0.416	0.175	0.017	상호작용항	0.712	0.096	0.000	
1 분 위	상위층 임금몫	-0.314	0.073	0.000	기혼여성 고용비증	-0.769	0.043	0.000	
	가사생산대체서 비스 종사여부	-0.395	0.019	0.000	가사생산대체서 비스 종사여부	-0.795	0.054	0.000	
	상호작용항	0.122	0.101	0.226	상호작용항	0.825	0.097	0.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제4절 소 결

이 장에서는 가계생산대체서비스 분야 지출 성장이 고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앞서 본 기존 연구들을 통해 인구학적 변동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은 검토된 바 있지만, 고임금층 소득 증가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검토된 바 없었고, 인구학적 변동의 영향 역시 고용자료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었다.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는 특성상 사람이 오갈 수 있어야 하므로, 국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르면,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가 많아야, 또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그 근처에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가 활발하게 생길 수 있다. 이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지역 대표성이 있는 고용자료여야 가능하다. 2008년부터 통계청에서 지역고용조사를 생산하여 소지역 단위의 고용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장의 분석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사생산대체서비스가 저임금 성격이 매우 강하며, 고학력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학력자 비중이 높고, 직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들 서비스의 수요층은 고소득층인데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층은 저숙련, 저임금 계층이라는 의미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지역을 구분할 때 광역시 및 시군 단위를 독립된 지역으로 간주하는 통상적인 분석과 노동시장권 설정 이론에 따른 노동시장권역 구분에 근거한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행정단위에 기반한 분석에서는 고소득층 소득 몫 증가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고용 간에 양(+)¹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던 반면, 노동시장권에 따라 분석할 경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양(+)¹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선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도 활발한 결과가 행정 단위/

노동시장권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해당 지역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근로자, 특히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의 임금에 미친 영향도 확인해 본 결과, 중위임금부터 낮은 임금으로 갈수록 분위회귀의 상위층 임금 몫과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종사 여부의 상호작용항의 절대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2분위까지 증가하다가 1분위에서는 절대값이 줄어들었다. 다른 분위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2분위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는 상위층 임금 몫이 커질 때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런데, 좀 더 뚜렷한 임금증가 효과는 기혼여성 고용비중에서 나타난다. 해당 지역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면 임금 분위가 낮아질수록 더 크게,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고용자료를 담고 있는 데이터들은 가구 수준의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아 이 장의 분석에서는 소득불평등, 특히 고소득자의 소득 증가의 영향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의 영향만 제대로 검토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제 5 장

결 론

소득분위별 지출행태 연구는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고용자료를 이용해 소득불평등 심화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증가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가구의 인구학적 변동이 소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된 바 있지만, 마찬가지로 고용자료를 이용해 관련 분야 고용에 미친 영향도 분석이 미미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부족했던 가구의 소비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의의가 있다. 특히 국제 금융위기 이후 저임금 비중이 줄어들고 불평등이 완화되는 지표상의 추이가 나타나는데, 이전 같으면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을 돌봄 노동 등의 사회화는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강력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최근 추이를 가구 수준에서 나타나는 인구학적, 불평등적 변화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와 연관시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2장과 3장에서 소비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패턴 변화와 소득, 인구학적 변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고용자료를 이용해 소득, 인구학적 변동과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가구불평등 심화/인구학적 변동 → 소비양상 변화 → 고용변동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인과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소비자자료

가 있으면 고용자료가 없고, 고용자료가 있으면 소비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제 분석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고, 대신 가구불평등 심화/인구학적 변동 →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증가, 가구불평등 심화/인구학적 변동 →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고용증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해야 했다. 소비자료를 이용해 전자를, 고용자료를 이용해 후자를 분석했으며, 각각 3장과 4장에서 다루었다.

2장에서는 전체적인 인구, 가구구조 변화와 전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가구 지출 품목별 소비행태의 장기 추이를 분석했다. 추이 분석과 더불어 기존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소비패턴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식료품에 대한 소비 비중의 축소였다. 또한, 의류·신발 항목도 지출이 감소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분석기간 동안 지출 비중이 증가한 항목들은 음식·숙박, 주거, 교통, 통신, 보건이다.

표준가구를 설정하고, 표준가구 대비 각 유형별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를 비교·검토해 보면, 표준가구의 소득 수준이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1990년대 중후반 이전에는 비표준가구의 소득 혹은 전체 중위소득에 비해 표준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후 점차 높아져 최근에는 비표준가구 평균소득에 비해서는 약 120% 내외,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의 중위값 대비 비율은 130% 내외 수준이다. 즉, 분석기간 동안 표준가구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은 중위값의 80~140% 수준으로 중산층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상위소득층의 소비구조는 최근 들어 표준가구와 상대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1인 혹은 2인 가구의 소비구조는 하위층의 소비구조와 유사한 편이다. 즉, 생활필수품에 가까운 소비의 비중은 높은 반면, 다른 항목들의 비중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노인가구의 소비구조를 표준가구와 비교해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 항목과 같은 생활필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이 표준가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주류·담배,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비중은 표준가구와 유사하다. 그리고 나머지 6개 항목

들(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은 표준가구에 비해 매우 낮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패턴은 저소득 가구의 패턴과 일견 유사하지만, 그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소비구조는 표준가구와 비교할 때 교통, 통신, 음식·숙박에 대한 소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건, 오락·문화, 교육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소비패턴 변화 외에도 Lindley and Machin(2013)에 기초한 저임금 서비스 분류에 따른 항목들을 저임금서비스 소비 분야로 정의하고 지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들 서비스 소비 분야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던, 또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던 자체적인 생산활동이 외부화되었다는 의미에서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이라 부를 수 있다.

가구 유형별로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이 지출은 증가하는 추이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가구 유형별로는 차이가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소비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은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경우 1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볼 때, 하위층의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중산층과 상위층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소득수준만이 아니라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차이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소득 수준만으로 저임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의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상위층 내에서 가구주의 학력을 구분(대졸 이상=고학력자, 대졸 미만=저학력자)한 결과, 상위층 내 고학력자가 다소 그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예상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 양극화와 그에 따른 저임금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현상이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최근 제시되고 있어 검토를 해보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그에 따른 저임금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현상의 지역적 특성이 한국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일지라도 거주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저임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올수록 더욱 뚜렷

해진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좀 더 분석의 초점을 가사생산대체서비스로 옮겨 가구의 인구학적 변동, 소득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소득 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1보다 큰 값이 도출되어, 가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이 사치재 특성을 가지고 있음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소득 향상 및 고소득 중심의 불평등 심화는 둘 다 가구생산대체서비스 증가를 야기할 것이다. 이는 소득구간별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반면에 소득불평등이 저소득 가구의 증가로 귀결된다면 대체서비스 지출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즉, 어떤 불평등이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맞벌이 가구 증대, 1인 가구 증대, 배우자 없는 2인 이상 가구의 증대는 대체서비스 증가의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6세 미만 자녀 유무는 2000년대 중후반에는 대체서비스 비중 증가의 방향으로 작용했지만, 무상보육 확대로 최근에는 그 힘이 약화되었다. 반면, 고령 가구원의 존재는 고령자 관련 서비스 증대로 대체서비스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최근 들어 엇보인다. 특히 측정오차를 통제한 모형에서 그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분해를 해보면, 소득 증가와 맞벌이화 같은 가구 형태 변화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 비중 증가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은 소비패턴 변화, 특히 저임금 고용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지출의 증가에서 예상대로 양극화로 인한 고소득층 증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맞벌이화 같은 인구학적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가계생산대체서비스 분야 지출 성장이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는 특성상 사람이 오갈 수 있어야 하므로, 국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르면, 고속권, 고임금 일자리가 많아야, 또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그 근처에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가 활발하게 생길 수 있다. 이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지역 대표성이 있는 고용자료여야 하므로, 통계청 지역고용조사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사생산대체서비스가 저임금 성격이 매우 강하며, 고학력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학력자 비중이 높고, 직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지역을 구분할 때 광역시 및 시군 단위를 독립된 지역으로 간주하는 통상적인 분석과 노동시장권 설정 이론에 따른 노동시장권역 구분에 근거한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행정단위에 기반한 분석에서는 고소득층 소득 몫 증가와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 고용 간에 양(+)¹⁾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던 반면, 노동시장권에 따라 분석할 경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양(+)¹⁾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선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고용도 활발한 결과가 행정단위/노동시장권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해당 지역 가사생산대체서비스 근로자, 특히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의 임금에 미친 영향도 확인해 본 결과, 중위 임금부터 낮은 임금으로 갈수록 분위회귀의 상위층 임금 몫과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종사 여부의 상호작용항의 절대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2분위까지 증가하다가 1분위에서는 절대값이 줄어들었다. 다른 분위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2분위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는 상위층 임금 몫이 커질 때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런데, 좀 더 뚜렷한 임금증가 효과는 기혼여성 고용비중에서 나타난다. 해당 지역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면 임금 분위가 낮아질수록 더 크게,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가사생산대체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볼 때,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의 고용증가는 노동수요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관련 종사자 임금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강한 지역과 상위층 임금이 보다 빠르게 오르는 지역에서 보다 많이 오르고 있는 현상이 분석결과 나타났다.

다만, 고용자료를 담고 있는 데이터들은 가구 수준의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아 이 장의 분석에서는 소득불평등, 특히 고소득자의 소득 증가의 영향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의 영향만 제대로 검토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2장의 분석에 따르면 수준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맞벌이나 외벌이 가구, 저소득 가구나 고소득 가구 모두에서 이 분야 지출이 증가한 것을 보면 선호(preference)의 변화도 중요한 원인일 수 있겠지만, 3장의 분석은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장기 소비지출을 연구할 때 각 소비항목별 상대가격의 변화가 지출 구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에 대한 검토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일자리 양극화로 인한 고소득층 소득성장이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강화, 1인 가구의 증가 같은 인구학적 변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추세이다. 이는 일종의 파급효과로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의 성장을 야기할 것이고 결국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업 고용정책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더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볼 때 저숙련 서비스업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고용정책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미 법안으로 검토되고 있듯이 가사서비스업에 사회보험이 적용되게 하거나, 가사생산대체서비스 부문은 소규모 사업체가 많으므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두루누리 사업같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분석을 통해 보았듯이 이 산업분야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사치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고 서비스의 질을 신뢰할 수 있게 한다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미 음식업의 경우 기존의 주축이었던 고졸 이하 여성 조리사나 서비스 종사자는 감소하고 대신 전문대졸 이상 남성 조리사나 서비스 종사자가 증가해 일자리 특성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의 특성상 보육, 돌봄같이 사회서비스의 영역이 커

정부의 지원정책도 영향이 상당히 크다. 어떻게 하면 이 분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분야에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 질까지 높일 수 있을지에 정책적 고민을 집중할 때다.

참고문헌

- 강정희·설연옥(2012), 「중년독신여성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2), pp.127~151.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년도.
- 권오정(2010), 「노인단독가구 유형별 생활행태 특성 및 유비쿼터스 홈서비스 요소 제안」, 『한국노년학』 30(3), pp.759~778.
- 권혁진(2009), 「가구균등화지수의 분배이론적 의미와 불평등지수에 미치는 영향 - 1982년~2004년 도시가구 가계지출을 중심으로」, 『응용경제』 10(1), pp.163~195.
- 김년희·채정숙(2005), 「독신가구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 pp.85~103.
- 김동구·박선영(2013), 「고령인구 비중 증가가 소비구조 변화를 통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6(6), pp.2519~2546.
- 김용진·이철인(2013), 「고령화에 의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장기적 메커니즘」,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9(1), pp.1~69, 한국금융연구원.
- 박선옥·최현자(2008), 「미혼독신가구의 소비지출과 저축 행태 및 유형화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2), pp.33~52.
- 박형수·홍승현(2011),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반정호(2012),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KLI 고용·노동리포트』, 통권 제22호(2012-10),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 백운광(2008), 「한국 도시가구 계층별 소비지출의 구성과 분배 - 1982~2006년 '가계조사'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백학영(2010),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 가구의 소비특성 차이 분석」, 『한국노년학』 30(3), 한국노년학회, pp.911~931.
- 성영애(2013),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패

- 턴, 『소비자학연구』 24(3), pp.157~181.
- 성영애·양세정(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 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대한가정학회, pp.103~117.
- 심영(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pp.197~208.
- 양세정·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한국가정관리학회, pp.173~190.
- 여운경(2003),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패턴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한국가정관리학회, pp.1~12.
- 이상호·배기준·윤윤규(2012),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결과」, 윤윤규 외,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 한국노동연구원.
- 전상민(2013), 「단독가구의 소비지출패턴 유형 및 결정요인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44(3), pp.21~43.
- 정영숙(2000), 「소비지출패턴: 연구동향과 미래전망」, 『소비자학연구』 11(2), pp.85~101.
- 정운영·정세은(2011), 「1인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연구 - 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구의 비교」, 『한국노년학』 31(4), pp.1119~1134.
- 최경원·임연옥·윤현숙(2012), 「사별 여성노인의 가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의 차이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5, pp.85~104.
- 최금옥(2011),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유형화 및 영향 요인분석」, 『노인복지연구』 51, pp.277~296.
- 최바울(2013),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구의 소비패턴과 산업별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36(1), pp.93~129.
- 최승균·박대섭·홍완수(2012), 「싱글족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행동연구: 서울 및 수도권지역 25세 이상 54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외식경영연구』 15(1), pp.131~153.
- 최홍철·최현자(2014),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와 소비지출양식에

-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3), pp.93~125.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 통계청 보도자료(2011.12.7.)
- _____(2012), 「장래가구추계: 2010~2035년」, 통계청 보도자료(2012.4.26.)
- _____,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 _____,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 홍석철·전한경(2013),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한국경제의 분석』, 19(1), 한국금융연구원, pp.71~121
- 황상필(2009),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Working Paper』 413.
- 황수경(2011), 「가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33(3), pp.58~85.
- _____(2013), 「가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33(3), pp.57~85.
- Autor, David H. and David Dorn(2013), “The Growth of Low-Skill Service Jobs and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103(5), pp.1553~1597.
- Baumol, William J.(2007), *On Mechanisms Underlying the Growing Share of Service Employment in the Industrialized Economies*, in Mary Gregory, Wiemer Salverda, and Ronald Schettkat(eds.), *Services and Employment - Explaining the US-European Gap*, Rinceton University Press.
- Blinder, Alan S.(2007), “How Many U.S. Jobs Might Be Offshorable?”, CEPS Working Paper No.142.
- Blow Laura, Kalwij Adriaan and Javier Ruiz-Castillo(2004), “Methodological Issues on the Analysis of Consumer Demand Patterns over time and Across Countries”, Working paper No. 9, DEMPATEM working papers.
- Kalwij Adriaan & Wiemer Salverda(2007), “The Effects of Changes

- in Household Demographics and Employment on Consumer Demand Patterns”, *Applied Economics* 39(11), pp.1447~1460.
- Lindley, J. and Stephen Machin.(2013), “Labour Market Polarization, Urbanization and Skill-Biased Consumption”, King’s College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and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downloaded at <http://www.sole-jole.org/14398.pdf>).
- Manning, Alan(2004), “We Can Work It Out : The Impact of Technological Change on The Demand for Low-Skill Workers”,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1(5), pp.581~608.
- Mazzolari, Francesca & Giuseppe Ragusa(2013), “Spillovers from High-Skill Consumption to Low-Skill Labor Marke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1), pp.74~86.
- Online OECD Employment database, <http://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earndisp>.

◆ 執筆陣

-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권혁진(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가구의 소비행태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발행연월일 | 2015년 12월 24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 발행인 | 방 하 남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31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조판·인쇄 | 고려씨엔피 (02) 2277-1508/9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등록번호 |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2015 정가 5,000원

ISBN 979-11-260-0025-8